

저들이 외면하는 이번 대선의 진정한 의제



정리해고 · 비정규직
없는 세상



전쟁 없는 세상



핵 없는 세상

투쟁을 건설할 때 두장은 가능하다

2차 혁명으로 가는 이집트 민중

▶ 관련 기사 7, 11면

누구의 말일까요?

“로켓으로 공격받는 데 방어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니냐.”
궤변으로 이스라엘의 학살을 옹호한 오바마

“가자를 납작하게 만들어야 한다. 히로시마에 핵폭탄을 쏜 뒤에도 빨리 회복하지 않자, 미국이 나가사키에도 한 방 더 떨어뜨렸던 것을 보라”
이스라엘 전 총리의 아들 사론

“한국에서 ‘농담’하면 감옥갈 수도 있다”
김정일 풍자 글로 보안법 유죄받은 박정근에 대한 CNN 헤드라인

“김영삼 전 대통령을 모시고 집권해 청와대에 가 보니 거짓말 안 보태고 이 방의 한 40퍼센트 정도 되는, 은행지점보다 더 큰 스테인레스 금고가 있었다.”
김무성

“근해 모습 너무 썩시해. ... 브이라인 ... 에스라인, 박근혜가 죽여줘요.”
“니가 쉽게 볼 여자가 아닌 걸, 예쁜 사람 예쁘잖아”
박근혜 로고송, 차칭 ‘여성대통령’의 준비된 홍보

“[안철수=] 만에 하나 대통령에 당선됐다 해도 임기 중에 암살을 당했거나 아니면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말았을 것
우익 노인 김동길의 저주

“반인반신(半人半神)의 지도자(박정희)는 이제 위대한 업적으로 남아 영원히 기억되고 있다”
구미시장 남유진, 여기가 북한인 줄 아니?

“이렇게 일선 검사들이 주장을 하면 뭔가 진정한 개혁인인 것처럼 비춰지고 ... 총장님이 정말 큰 결단해서 그런 개혁안을 수용하는 모양새가 제일 효과적 ... 내가 제안한 내용들은 사실 별거 아니고 우리 검찰에 불리할 것도 별로 없다.”
검사 윤대해, 들끓는 검찰개혁 사기극의 실체

“먹다 남은 양념통닭(2마리 분량) 먹음”
현대차 꼼꼼한 몽구 씨의 노조 사찰 일지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구체적인 것은 얘기하지 말라. 세계 나가야 활로가 생긴다. 욕하는 심정은 표현하라. 실명을 보도하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하고 단호하게”
대검 중수부장 최재경이
비리 검사 김광준에게 보낸 깨알 같은 조언

거리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경주 월요일 (다음호는 12월 17일)
서울 건대입구역 4번 출구 오후 7:00~8:00 인천 주안역 남광장 오후 6:40~7:40 울산 현대차 4공장 구 정문 건너편 오후 6:45~8:40 건국대(서울) 학생회관 앞 오전 11:45~12:45 고려대(인암) 정경대 후문 오후 1:00~2:00
경주 화요일 (다음호는 12월 18일)
서울 강남역11번 출구 오후 7:00~8:00 서울 혜화역 4번 출구 오후 7:00~8:00 서울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오후 7:00~8:00 수원 수원역 지하상가 1번 출구 앞 오후 7:00~8:00 한국외대(서울) 인문관 앞 오후 12:30~1:30 서울 국민대(북악) 복지관 1층 오후 12:00~1:00 부산대(부산) 정문 앞 오전 11:50~12:50 서울시립대 학생회관 앞 오후 12:00~1:30 이화여대 포스코관 지하 1층 오전 11:30~12:30
수요일(다음호는 12월 19일)
울산 성남동 젊음의 거리 중부소방서 옆 오후 7:00~8:00
목요일(다음호는 12월 20일)
대전 충남대 공대2호관 앞(쪽문) 오후 12:30~1:30

서점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그날이 오면(서울대입), 인사점(건국대입), 풀무질(성균관대입), 이음책방(대학로), 숨어있는 책(신촌),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역촌), 통방서림(울산 현대차공장 앞)

썩은 체제의 수호자인 엽기 검찰이 고름을 쏟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 속에서 뿌리까지 썩은 검찰의 악취나는 실체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희대의 다단계 사기범에게 돈을 받은 “다단계” 검사, 피의자를 사실상 강제로 범한 “성폭행” 검사, ‘박근혜가 될 때까지 개혁하는 척하면 된다’는 “여론 조작” 검사까지 등장했다. 대중적 분노가 폭발할 지경이지만 검찰은 “성폭행” 검사가 ‘뇌물을 받은 것’이라며 감싸고 있고, 대검 중수부장과 검찰총장은 “다단계” 검사에게 은밀히 도움을 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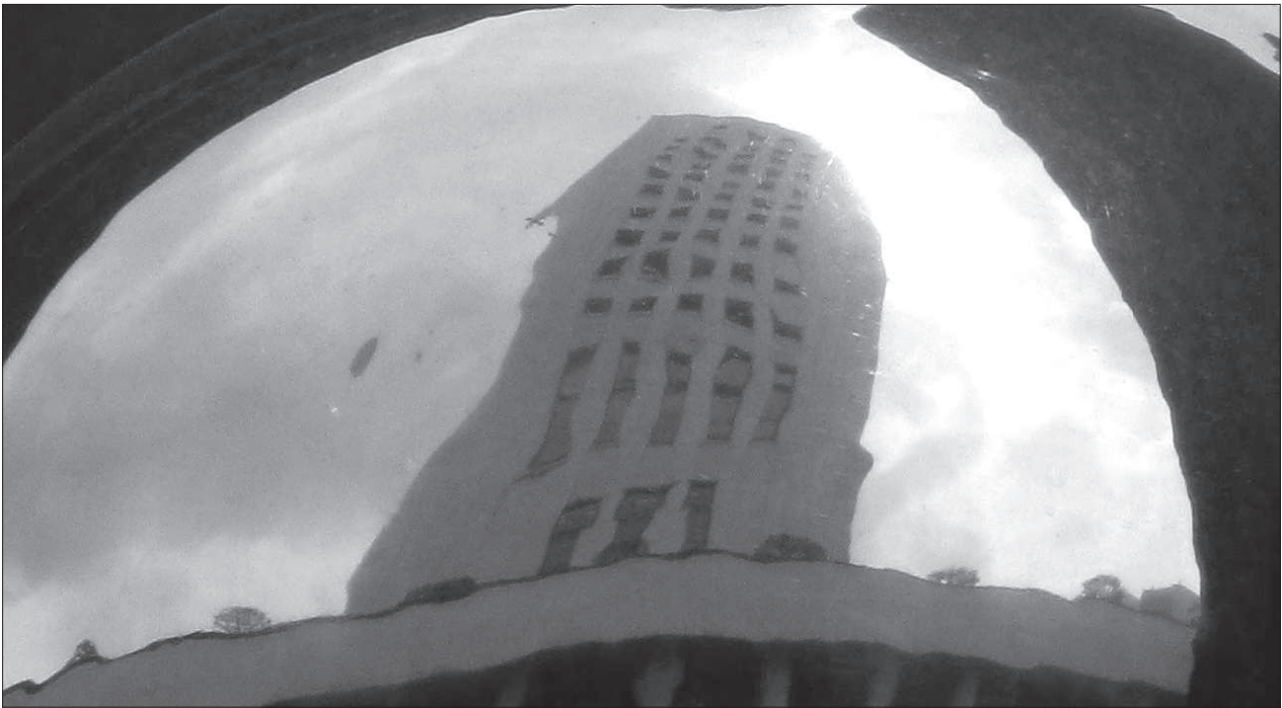
BBK와 내국동 수사를 덮는 데 앞장선 검찰총장 한상대는 그것도 모자라 최근, 같이 테니스를 치는 사이라는 SK 회장 최태원의 구형량을 “(7년에서) 4년으로 낮춰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런 행태에 분노가 들끓자 검찰총장과 대검중수부장은 서로 사퇴하라며 진흙탕 개싸움을 벌였다. 정말이지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다.

사실 검찰의 이런 역겨운 행태는 하루 이들의 일이 아니다.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다가 미군정에 빌붙어 다시 또 민족과 민중을 유린하고, 군사독재와 문민독재에 아부하며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해 온 것이 검찰 백년의 역사”(경상대 법대 이창호 교수, <검찰 개혁의 방향과 과제>)다.

민주화가 된 이후에도 검찰은 삼성 X파일 등에서 보듯 재벌과 권력자 들에 빌붙어 왔다.

검찰의 이런 행태는 자본주의에서 검찰이 하는 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썩어문드러지고 일그러진 검찰 대검찰청 앞 조형물에 일그러진 청사의 모습이 보인다.

검찰은 경찰, 군대와 함께 본질적으로 자본가들을 위한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억압기구의 하나다. 자본주의는 소수 지배계급이 다수의 노동자 계급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사회이고, 이 사회에서 권력자들은 언제나 자신의 재산과 권력을 지키기 위한 억압기구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검찰은 혼백, 인맥과 ‘떡값’, 성상납 등의 더러운 그물망으로 자본가들과 끈끈하게 연결돼 있다.

검찰이 노동자 파업은 무자비하게 탄압하면서도 재벌 회장들은 어떻게든 감싸려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래서 검찰은 10년 동안이나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정몽구는 처벌하지 않으면서, 현대차·쌍용차 노동자들은 잡아 가뒀다. 진보운동을 위축시키려고 ‘종북좌파와의 전쟁’을 벌이며 국가보안법을 휘두르기도 했다. 검찰은 악취나는 부패의 한가운데 있는 부정의한 사회의 수호자인 것이다.

최근 드러난 검찰 부패의 진상을 밝히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검찰총장 한상대만 아니라 대검 중수부장 최재경, 법무부 장관 권재진 등이 다 사퇴해야 한다. 이 억압기구가 멧돼지 더러운 칼을 휘두

르지 못하도록 배심원제나 선출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도 정당하다.

최근 문자를 잘못 보내 본심이 들롱 난 검사가 말했듯, “큰 개혁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별 내용이 없는” 조치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무엇보다 검찰의 위기를 이용해 권력자들과 기득권 구조에 맞선 노동자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최근 검찰이 생색내기 식으로 몇몇 노조 파괴 회사를 수사한 것도 투쟁의 압력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정선영

쌍용차 살인하고 첩회 투쟁

“살고 싶어서 목숨 걸고 첩탐에 올랐습니다”



쌍용차 정규직·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세 명이 “더는 죽이지 말라”며 또다시 목숨을 건 고공 농성을 시작했다. 김정우 지부장이 단식 41일 만에 병원으로 이송된 직후 바통을 이어받은 것이다.

지금 이들은 한발 잘못 내딛었다가 고압 전류에 몸이 빨려들어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윤밖에 모르는 냉혈한 사측과 정부가 ‘공장 안으로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며 송전탑의 15만 4천 볼트 전류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칼바람을 맞으며 투쟁하고 있는 한상균 쌍용차지부 전 지부장(사진)의 인터뷰를 요약해 싣는다.

“우리 쌍용차 노동자들은 2009년에 잔혹한 탄압 속에서도 투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자비한 진압에 물러설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정당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싸워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너무나도 절박한 심정으로 송전탑에 올랐습니다. 혹한에 우리 세 명이 공공 열어서 몸을 가눌 수 없게 되더라도, 저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힘있게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생사를 넘나들고 있는, 소식조차 끊긴, 수백·수천 조합원 동지들의 간절한 바람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먼 발치에서 공장 굴뚝이 보입니다. 저 공장이 정말 꿈으로도 보이고, 한편으로는 탐욕의 동굴로도 보입니다.

김정우 지부장 동지가 인간의 한계를 넘는 단식을 했지만, 결국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선거에 표만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정치권에 기대서 연을 게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대신 기간에 우리 스스로의 힘이 정치라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지들의 관심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추위를 견뎌내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정리 박설

<레프트21>에 재갈을 물리려던 시도가 보기 좋게 실패하다

선거법을 빌미로 <레프트21> 정기 거리판매 행위를 방해하고, 판매자인 나에게 출석요구서까지 발부한 인천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사실상 백기 투항했다.

선관위는 최근 나에게 공문을 보내, 이 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선관위는 공문에 “<레프트21> 신문 판촉 행사를 위해서 신문 제 90호에 게재된 여러 기사 중 일부로서 [박근혜 비판 기사기] 언급된 점”과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점을 감안”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적고 있다.

이는 소형 확성기를 이용해 박근혜 비판 기사 등을 소개한 것이 신문 판매 행위고, 이를 방해하고 탄압하는 것은 언론

표현의 자유 탄압이라는 우리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이에 비춰 보자면, 선관위가 ‘공명선거 협조요청’이나, 판매자들의 공직선거법 이해 부족을 운운한 것은, 자가당착이고 궁색하기 짝이 없다.

연대

선관위의 언론 표현 자유 탄압에 맞선 이번 투쟁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광범위한 연대 덕분이다. 탄압의 당사자인 <레프트21>뿐 아니라,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노조, 한국진보연대, 통합진보당, 보건의료단체연합, 다산인권센터,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자연대다함께, 운동초심모임, 촛불네트즌공권력탄압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가 선관위 규탄

기자회견을 공동 주최하거나 성명서 연명을 통해 목소리를 보냈다. 그래서 선관위는 기자회견 당일에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번 승리는 최근 노동자 투쟁의 분출과 우파들의 위기, 사회적 분위기의 반영인 듯하다.

현대차 비정규직·쌍용차·학교 비정규직 등 다양한 노동자 투쟁들이 우후죽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지배자들로 하여금 작은 양보들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레프트21>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노동자와 평범한 사람들을 고통으로 내모는 정권, 집권당, 기업주들의 만행을 폭로하고, 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당연히 그 한 방식으로써 정기 거리 판매 또한 변함없이 진행할 것이다.

소은하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세상을 바꾸자! 12·8 민중대회
일시: 12월 8일(토) 오후 4시 장소: 서울 시청광장 주최: 민중의 힘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일시: 12월 8일(토) 오후 2시 장소: 서울역 주최: 공공부문민영화반대 공동행동준비위원회

‘1% 천국 99% 지옥’을 예고하는 박근혜

새누리당은 지금 투표율만 높지 않으면 보수 지지층 결집으로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2008년 총선과 2012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을 포함한 주요 우파 정당이 얻은 득표 합계는 엇비슷하다. 그런데도 2008년에 우파가 얻은 의석수가 30석가량 많은 것은 반우파층의 투표율과 결집 정도가 달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보수 대연합’ 색채가 두드러지고 있다. 어차피 반우파 젊은층의 표를 얻기는 힘들 테니 확실한 우파 결집 후 반우파층의 투표율 낮추기 전략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차떼기’ 이회창, ‘피부관리’ 나경원 등 낡고 부패한 1퍼센트 상징 같은 인물들이 속속 박근혜 주변으로 몰려들고 있다.

문재인과 안철수가 감동과 비전 없는 단일화 과정으로 반우파층에게 실망을 주면서 박근혜의 행보는 더 탄력을 얻은 듯하다.

이에 따라, 박근혜와 그 측근들의 반동적 본색도 잘 가려지지 않고 있다.

김무성은 2008년 촛불항쟁을 두고 “대통령이 공권력으로 확 제압했어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본심을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투표시간 연장 법안과 최저임금 인상 법안을 무산시키더니 제주 해군기지 예산안도 국방위원회에서 날치기했다. 박근혜 정권의 ‘미래’를 화끈하게 미리 보여 준 셈이다.

박근혜는 지금 문재인을 ‘실패한 노무현 정권의 실세’라는 식으로 비난한다. “비정규직이 그때 양산됐고, 등록금이 폭등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이지만 유신독재의 기동이자 잔당인 박근혜 세력은 그것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

게다가 노무현조차 너무 ‘친노동’이라며 더한 개악을 주문했던 자들이 바로 오늘의 새누리당이었고, 박근혜가 바로 그 당의 대표였다.

23명이 억울하게 죽어 갔는데도, 쌍용차 국정조사조차 못 하겠다는 것이 박근혜,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를 모른 채하는 것이 새누리당이다.



민중미술가 홍성담 씨가 박근혜의 본질을 잘 포착해 그린 '바리캥-우리는 유신스타일'

박근혜가 민생법안이라고 내놓은 ‘사내 하도급법’을 두고 노동자들은 ‘정몽구법’이라고 부른다. 이 법안대로면, “현대차는 합법적으로 하청 노동자들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권두섭 변호사)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8천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무효화되는 것이다.

박근혜의 ‘법과 원칙’은 우파와 기업주를 위해 노동자를 때려잡는 것이고, 박근혜의 ‘소통’은 불법 사찰과 탄압 따위를 위해 정부의 억압

기구와 기업주가 연계하는 것일 뿐이다.

오죽하면, 대선을 앞두고 노동조합들이 여기저기 대선 캠프와 줄을 대고 지지를 선언하는 상황에서도 박근혜를 공개 지지한 곳은 한국노총 내에서도 일부뿐이겠는가.

철두철미하게 ‘유신스타일’을 고수하는 반노동 우파 박근혜의 집권 가능성에 대해 노동자 대중이 강력한 우려를 표하는 이유는 이처럼 명백하다.

김문성

영남대의료원 여성 해고자가 말하는 박근혜

“여성대통령? 정말로 분노가 치밀어요”

영남대의료원 해고 노동자 박문진 지도위원은 영남학원의 실질적 책임자인 박근혜가 영남대의료원 해고자 문제를 직접 해결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 10월 23일부터 박근혜 집 앞에서 매일 3천 배를 하고 있다.

1990년에 영남대의료원에 민주노조를 세우는 데 앞장섰고, 1996~97년에는 전국적 총파업을 이끌다 수배됐던 박문진 지도위원이 영남학원의 악랄한 노동조합 탄압과 박근혜의 반노동자적 실재를 폭로한다.

영남학원을 박정희가 강탈한 거잖아요. 1988년까지 박근혜가 이사장으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학내 비리와 민주화 투쟁으로 물러났다가 2009년에 다시 ‘유혈 입성’을 한 거죠. 이사 일곱 명 중에서 네 명을 박근혜가 추천하고 영남대학교 총장, 의료원장 등도 자기네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죠.

2006년에 노동조합이 나흘 정도 파업을 했는데, 이게 전면 파업은 아니어서 사측에 큰 피해가 있지는 않았어요. 부분 파업이었는데, 그런 것 치고는 탄압이 너무 강력했죠. 손해배상과 해고, 정직 등... 탄압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 우리를 탄압했어요.

[최근 불법적 노동조합 파괴 공작으로 잘 알려진] 창조건설팀 심종두가 들어와서 노동자들의 파업을 유도하고, 그 다음 징계하고 해고하고, 노조 탈퇴시키고, [다른 작업장에서 자행한] 노조 파괴 시나리오와 똑같아요. 당시의 무자비한 탄압 때문에 1천 명 정도였던 조합원이 현재 70여 명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탄압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2009년에 박근혜가 들어오는 걸 보니까 이게 [박근혜 복귀를 위한] 사전 정치 작업이었구나 하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1년이 넘도록 1인 시위부터 시작해 이 집 앞에서 투쟁해 왔는데, 이 여자는 3천 배를 매일 하고 있어도 눈길 한번 안 줘요. 흔한 얘기로 3천 배를 하면



이문진

돌부처도 돌아앉는다는데, 오늘도 이 앞을 세 번이나 지나갔어요.

박근혜가 ‘국민대통령’, ‘여성대통령’을 말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분노가 치밀죠. 박근혜가 얼마 전에도 간호사 정책 대회에 가서 처음 개선하겠다고 했었는데, 저도 간호사거든요? 정작 1년이 넘도록 집 문턱에서 이런 식으로 투쟁하고 있는데, 눈길 한번 안 주면서.

전태일 열사 동상 앞에도 갔잖아요? 그 이후로 우리는 이 여자 지나가면 ‘살아 있는 전태일을 만나랴’고 외쳐요. 상당히 기만적이고 사기치는 거예요.

연대와 전투적 활동, 현장의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복원하는 게 필요해요. 1996~97년 당시엔 참 잘 싸웠어요. 그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다시 바닥부터 시작하면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아요.

인터뷰·정리 이현주

제주 해군기지 예산안 국방위 날치기

박근혜 시대의 흉측한 예고편

새누리당 의원들이 11월 28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예산안을 국회 국방위에서 날치기 처리했다. 강정마을 주민들이 수년 전부터 기지 건설에 반대해 연행과 처벌을 감수하며 싸웠고, 평화를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줄기차게 기지 건설을 반

대했는데도 강그리 무시한 것이다.

반대 운동 측은 제주 해군기지에 미국의 잠수함과 핵잠함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음을 여러 차례 폭로했다. 게다가 미국은 제주 해군기지를 대중국 봉쇄를 위한 전진기지과 MD 체제의 일부로 활용

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 강행은 한반도와 제주를 위협한만한 군사적 경정예 더욱 깊숙이 몰아넣는 꼴이다.

중미 갈등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는 와중에 제주 해군기지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게다가 이번 날치기 통과는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본색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 준 일이기도 하다. 박근혜가 당

선 후에도 이 사회의 1퍼센트를 위해 온갖 반동적 조처들을 힘으로 밀어붙일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날치기는 또한 문재인 등에 무비판적으로 의존해선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막기 힘들다는 것도 보여 줬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얼마 전까지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하다가, 최근 ‘반액 삭감’으로 후퇴했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국방위 표결을 강행할 때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물리

적으로 막을 수 없다”며 날치기 처리를 사실상 방관했다. 이러니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 등이 “문재인 후보는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우선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냐” 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현재 문정현 신부님과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은 날치기 예산의 전액 삭감을 요구하며 무기한단식·식발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의 요구는 평화를 바라는 우리 모두의 요구다.

김영익

문재인이 박근혜 대세론을 깨지 못하고 있는 이유

안철수 사퇴 이후 주류 언론들은 안철수가 대변한, 박근혜와 문재인 사이에 있는 중도층을 누가 데려가느냐가 당락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확한 분석이 아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사퇴 이전에 이미 안철수 지지율은 급락하고 있었고 이것이 그가 중도 하차한 핵심 이유로 보인다.

따라서 문재인이 ‘점진적이고 현실적인 복지’ 등 상대적으로 온건한 안철수의 공약들을 흡수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사이의 중도층을 흡수해야 한다는 주장은 헛다리 짚는 것이다. 김기원 방송통신대 교수는 이에 “안철수 현상의 ‘소통과 통합’ 정신에도 들어맞[게] 새누리당과도 협력하[는] 거국통합내각”을 구성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안철수는 오히려 새누리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자리를 잡으려다가 실패했다.

“노동 없는 공약으로 노동자에게 큰 실망을 안긴 것”(민주노총)이 대표적이다. 안철수는 한미FTA뿐 아니라 한중FTA도 찬성하고 NLL 사수론을 펴며 실망을 사 왔다.

한국궤멸 조사를 보면 이런 입장들이 발표되던 11월 둘째 주에서 셋째 주 사이에 안철수 지지층의 17퍼센트가 등을 돌렸다. 특히 변화와 개혁을 바라던 20~30대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정책과 대안은 찾기 힘든 단일화 과정도 감동은커녕 짜증만 남겼다.

그래서 단일화 뒤에도 문재인은 박근혜를 이기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는 죽어도 싫지만 문재인과 민주당은 못 믿는 청년들이

문재인으로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문재인에 대한 이들의 불신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무엇보다 노무현 시절 실망의 기억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노무현 정부의 “아쉬움”과 “실책”을 반성하는 것처럼 말하면서도 도대체 어떻게 당시의 실책을 극복할 수 있는지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날치기

진보 후보인 김소연 후보가 지적하듯 “문재인 후보가 쌍용자동차 김정우 지부장을 만나서 단식 중단을 호소하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어떤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지적하듯이 이명박이 ‘3개월 내에 재협상하겠다’

던 한미FTA에 관해서는 새누리당뿐 아니라 민주당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손잡고 예산안 조정소위 구성에서 진보정당(김선동 의원)을 배제하는 데도 합의했다. 이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제주 해군기지 예산안을 국방위원회에서 날치기했다.

선거 과정에서도 이미 NLL 등에서 우파에 굴복하고 있는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의심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그럼에도 박근혜만은 막아야 한다는 대다수 노동자들의 바람을 감안해서 그들과 소통하기 위한 불가피한 타협으로써 문재인에게 비판적 투표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진보진영의 일부처럼 문재인에 대한 비판을 삼가거나 민주당의 ‘국민

연대’ 구상에 함께하며 공동정부 구성으로 나아가려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독립적인 노동자 조직과 투쟁의 발목을 잡으며 결국 우파가 득세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문재인이 한계는 박근혜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총선 때 한미FTA, 제주 해군기지 등이 모두 ‘사실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것’이라는 사실을 몰고 늘어져 재미를 본 박근혜는 이번에는 ‘등록금 폭등, 양극화 심화, 비정규직 양산’이 노무현 정부의 실패라고 비난하고 있다.

따라서 대선 이후에도 진보의 독자적 정치 대안을 건설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장호중

이수호 서울교육감 후보 인터뷰

“새로운 시대를 위해 싸워 가겠습니다”

올해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단일 후보로 출마한 이수호 후보를 인터뷰했다. 이수호 후보는 전교조 위원장,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했다. 권영길 후보가 출마한 경남 도지사 선거와 함께 진보와 보수의 대결 무대가 된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이 후보는 조직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으며 보수 세력과 승부를 겨룰 것이다.

우리 교육의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바꾸고 싶습니까?

우리 나라 교육은 떨어질 대로 떨어져 바닥까지 왔습니다. 과도한 경쟁으로 학생들의 반사회적 행동과 폭력·자살 등이 나타나고, 또 교사들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교육 관료들과 ‘교육 마피아’라고까지 불리는 집단들이 학교를 점점 더 혼란에 빠뜨려 왔습니다.

저는 현장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고통스러운 학생·학부모·교사 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유하는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려는 혁신학교 운동을 평가하면서 잘못된 점을 보완하고 좋은 것들은 다른 곳으로 확산시키려 합니다.

일제고사, 교원평가제, 차등성과급 등이 왜 문제며 어떻게 막아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제고사는 마땅히 폐지돼야 합니다. 일제고사는 학교를 줄세워 완전히 성적 경쟁의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때문에 또 고통에 빠지고요.

교원평가는 원칙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있어서도 안 됩니다.

부적격 교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조치를 해야지 평가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성과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원을 ABC 세 등급으로 나누는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학교에서 하는 일도 다른데 일률적 잣대로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것 때문에 학교 현장에 교사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오해도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처우를 개선하려면 성과급을 차



사진:이매진

등 없이 균등하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대안입니다.

얼마 전 학교비정규직 파업 집회에 참가해 노동자들에게 힘을 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학교비정규직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한 학교의 비정규직 직종이 50개가 넘어요. 처우의 차이도 많은데다가 최저임금도 못 받는 일까지 있어요.

다행스러운 것은 그 주체들이 스스로 자기 권리에 눈을 뜨면서, 투쟁을 시작하고 있어요.

기회를 잘 살려서 학교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교육감이 직접고용하고,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단계적으로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화하면서 호봉제를 채택하고, 그런 것들을 모두 묶어서 준 공무원에 해당하는 교육 공무원으로 법제화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개혁에 발목을 잡는 기득권 세력의 압력을 어떻게 이겨낼 것입니까?

내가 단일화 할 때 토론회 하면서 그랬어요. “제가 전교조 위원장도 하고, 민주노총 위원장까지 하면서 정부나 자본가와 싸우며 감옥도 두 번 갔다 오고 땀집이 좋다. 싸움을 해도 내가 더 잘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적격이지 않겠냐.” 그러니까 다른 후보도 웃으면서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싸움은 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는 강성



이매진

쌍용차, 학교비정규직, 전교조 등 많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이수호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11월 27일 이수호 중앙유세단 출정식

이 필요합니다. 사실 김삼곤 경기도 교육감이나 진보교육감들이 자기 수준에 맞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진짜 단결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게 우리 교육을 지키는 길이고 교육감의 일입니다.

“전교조 후보”여서 문제라는 우파적 공격에 어떻게 맞설 생각이십니까?

이념적으로 덧칠된 부분은 변명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전교조 운동은 보수언론에 의해서 폄하되거나 엉뚱한 색깔로 덧칠돼 있습니다. 그러나 전교조 운동은 우리 교육의 어려움을 교사들의 운동으로 해결하려는 의미에서 참교육 운동이죠.

전교조는 1천5백 명이 잘리기도 하고 10년을 길거리의 교사로 헤매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희생 정신에 대한 자부심과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교사이고, 전교조 교사입니다” 하고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곳곳에서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진보 후보로서 한마디 해 주십시오.

단일화 경선을 할 때 김정우 쌍용차 지부장이 단식 30일을 한 몸을 이끌고 와서 [제] 투표했습니다. 한 표라도 보태야겠다는 그마음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부장은 병원으로 갔지만 광화문은 농성촌이 돼 있고, 도로 건너에는 1천

8백 일을 넘긴 학습지 노동자들이 있고, 철탑에 올라가고, 밀양에서는 또 철탑을 못 세우게 하려고 싸우고, 강정 등 ... 이런 곳곳의 운동들이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견인차 구실을 하는 겁니다.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저도 용산이 터졌을 때도, 쌍용차 때도, 희망버스를 타고 부산도 가며 동참했습니다.

지금 저는 교육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보자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역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싸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정리 정선영

전교조 지도부 선거

김정훈·이영주 후보를 지지하고 투쟁을 건설하자!

오는 12월 5~7일에 전교조 지도부 선거가 치러진다. 새 정부 첫 2년의 임기를 이끌 차기 전교조 지도부로는 상대적 좌파 후보인 김정훈·이영주 후보가 당선하는 게 바람직하다.

현 전교조 지도부와 같은 참실련(참교육실천연대) 경향인 황호영·남궁경 후보는 학교혁신을 위해 내부형 교장공모제 전면화와 학교자치제 도입을 최우선 교육 개혁 과제로 꼽는다. 내부형 교장공모제 전면화를 통해 승진제도를 혁파해 교단 분위기를 쇄신하고, 학교자치제 도입을 통해 교사를 학교운영과 학교혁신의 주체로 발전시켜 학교를 대대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구상이다.

좌파적인 목소리를 내 온 교찾사(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 경향의 김정훈·이영주 후보는 일제고사, 교원평가, 성과급, 특목고 등 경쟁교육제도 폐지와 교육여건 개선 사업(학급 당 학생 수 감축(20명), 교원확충, 교원업무 폐

지, 수업시수와 수업일수 감축 등)을 핵심 과제로 꼽는다.

황호영·남궁경 후보가 제시한 최우선 개혁과제는 김정훈·이영주 후보보다 훨씬 제한적이고 추상적이다. 이것은 황호영·남궁경 선본이 ‘학교혁신 운동’을 기층 조합원들이 동참하는 대중투쟁이 아니라 새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한 것과 관련이 있다.

참실련 경향은 그동안 과도한 투쟁이 전교조 위기의 원인이라며 노조의 투쟁성을 거듭 비판해 왔다. 참실련은 전교조 지도부 선거 때마다 2003년 네이스 반대 연가투쟁과 교원평가제 도입 저지 투쟁 등 교찾사 경향이 주도한 투쟁을 비판해 왔는데, 이번 선거에서도 그 점을 부각한다.

일단, ‘과도한 투쟁’ 노선이 전교조 조합원 감소를 낳은 원인이라는 비판은 현실과 맞지 않다. 2006년 이래 전국 집행권을 계속 참실련이 장악해 왔고, 최근

몇 년간 참실련 경향의 지도부가 역점을 둔 활동은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에 맞서는 대중투쟁 건설이 아니라 혁신학교 사업과 의회 로비 활동이었다.

과거 전교조의 주요 투쟁에 대한 이런 식의 깎아내리기는 황호영·남궁경 후보가 정권교체시 민주당 정부와 협력을 통해 교육 개혁을 이루겠다는 구상과 맞물려 있어서 더욱 위험하다.

깎아내리기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의 역사는 전교조가 바란 교육 개혁을 포함해 노동계급 대중이 염원한 개혁을 배신한 역사였다. 특목고와 자사고 확대, 교원평가제와 성과급제 도입, 학교비정규직 확대, 사립학교법 후퇴 등은 모두 민주통합당 세력의 집권기에 있었던 일들이다.

우파들의 이데올로기·정치적 공격에 무기력하게 굴복한 노무현 정부와 그 세력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개혁 후퇴의

책임을 엉뚱하게 투쟁적인 교사들로 돌리는 주장은 노동운동의 대의에도 어긋난다.

게다가 황호영·남궁경 선본은 이번 선거에서 김정훈·이영주 선본의 공보물을 공식 발표 전 몰래 불법적으로 입수했음이 드러나서 지탄을 받고 있다.

황호영·남궁경 선본은 진상 규명에 협조해야 하고, 노조 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관행은 근절돼야 한다.

무엇보다, 교육 개혁을 위한 근본 동력은 아래로부터 노동계급의 투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교조가 주도한 참교육 운동이 활성화된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는 1987년 6월의 대규모 항쟁과 7~9월 대중파업 물결로 사회 전반의 이데올로기·정치 지형이 좌선화한 시기였다. 당시 전교조 교사들의 운동은 그런 정치적 조건을 만든 노동계급 투쟁의 주도적 일부였다.

세계경제가 다시 악화하고 그 일부인

한국 경제도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의 교육 정책이 더욱 우경화하고 교사들과 전교조에 대한 공세도 앞으로 강화될 것이다. 박근혜는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 세력도 그들의 계급적 기반 때문에 한계를 보일 것이다.

따라서 투쟁 회피적 노선을 비판하면서 투쟁을 적극 건설함으로써 전교조의 위기를 극복하고 교육 개혁을 이루겠다는 김정훈·이영주 후보가 전교조 지도부에 당선하는 것이 향후 대중투쟁 건설에 이롭다.

김정훈·이영주 후보가 당선해 교과부의 교육 정책에 맞서는 교사들의 대중투쟁을 건설하고,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연대 활동을 적극 벌이기 바란다. 좌파 교사들은 김정훈·이영주 후보의 선거운동을 성공적으로 벌이면서, 예상되는 국가의 교육 부문에 대한 공격에 효과적으로 맞설 정치적·조직적 준비를 해야 한다.

정진희

박성락 현대차 정규직 대의원

“정규직이 비정규직과 함께 대체인력을 막아냈습니다”

박성락 동지는 현재 울산 1공장 정규직 대의원이며, 2010년 25일 점가파업 등 비정규직 투쟁에 꾸준히 헌신적으로 연대해 왔다.

정규직이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해야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조업 같은 경우는 혼재돼서 일하는 콘베어 방식인데, 똑같은 작업을 하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많이 일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 자체가 불합리합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미래의 우리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는 게 크죠.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은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먼저 잡고 들어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회사가 3천명 신규채용을 요구하고 있는데 결국 그렇게 마무리 된다면, 나머지 2차·3차 하청업체와, 1차에서도 간접 생산라인과 직접 생산라인이 또다시 갈라지잖아요. 결국 자중지란에 빠집니다. 이렇게 되면 대중에게도 외면받게 되겠죠.

사측은 수익성 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수많은 비정규직들을 사용하고, 부품사 부품단가를 낮춰가며 노동자를 착취하고 이윤을 쥔 것입니다. 사측은 이윤을 위해 고용 유연화를 받아들이라 하는데, 자본의 위기를 왜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까? 우리가 한발 정도 들어간다고 한들 회사가 들어줄까요? 그것이 더 불가능합니다.

자동차 내의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이라는 기치를 들고 힘있게 나간다면, 대공장에서 그것이 일궈진다면 크나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현대차 사측의 ‘직고용 계약직’ 고용은 왜 문제입니까?

사측은 지난 8월에 개정 파견법을 피해 가려고, 일방적으로 한시 하청 노동자



사진 이미지

들을 직고용 계약직으로 바꿨습니다. 당시 정규직지부는 직고용 계약직 관련해 사측과 합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6대 요구안과 충돌되기 때문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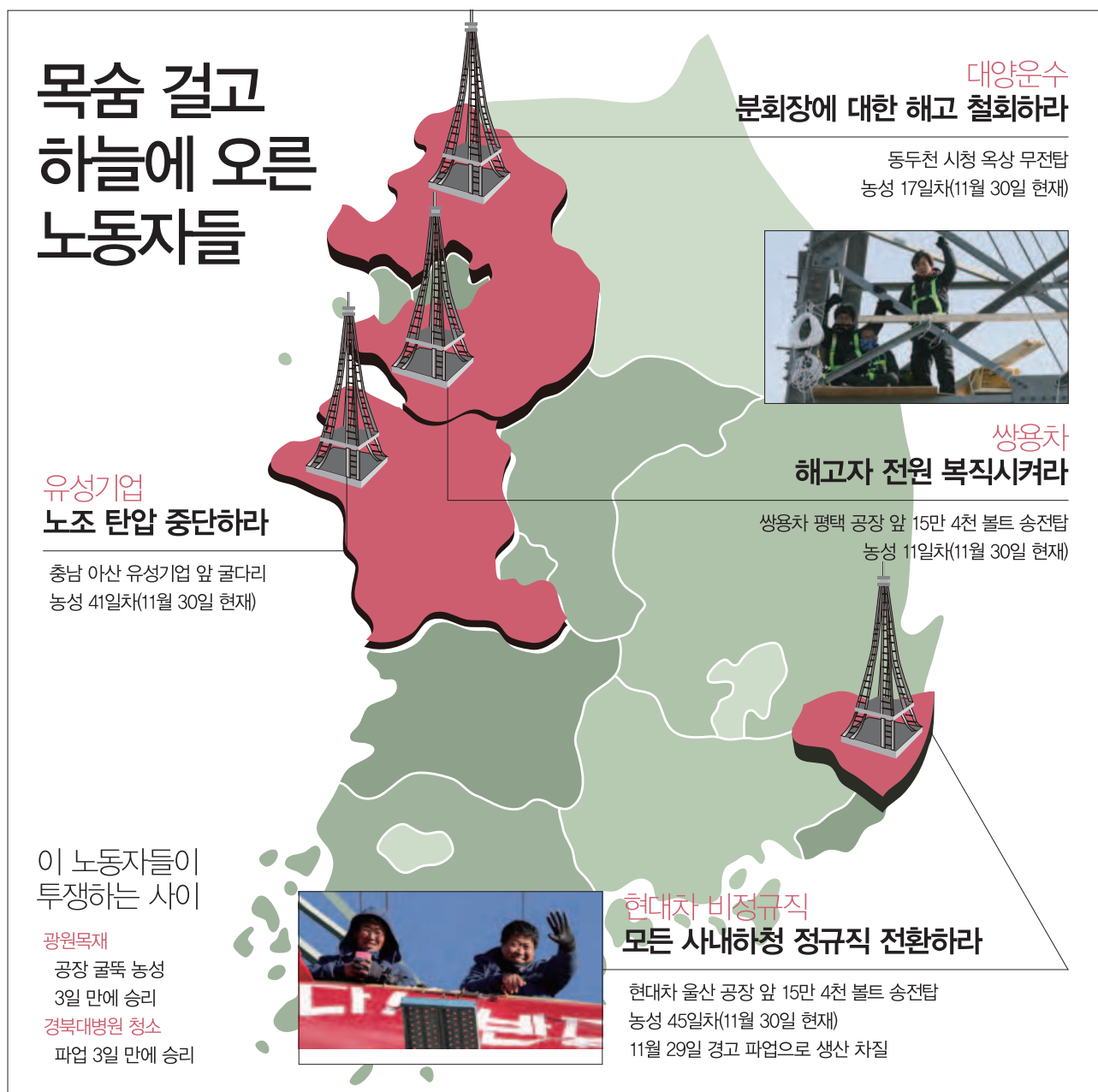
그런데 지부 집행부는 11월 20일에 ‘휴직·파견·노조전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 촉탁계약직을 운영할 수 있다(이 외 혼류생산 등 한시적으로 인력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타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고 사측과 합의했습니다. 계약직이 계속 양산될 우려가 있는 것이죠. 더구나 [휴직 등으로 자리를 비웠던] 정규직이 나중에 현장에 복귀하면, 계약직 노동자는 해고되거나 공정을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비정규직 문제 전반을 다루고 있는데, 교섭 요구안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한 것은 지부 집행부가 스스로 모순을 보여 준 것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본격적인 현장 투쟁에 나선 지금, 정규직 활동가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2010년 25일간의 CTS 점가파업 기억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정규직 대의원들과 활동가들이 먼저 결의했죠.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밥을 못 먹고 있으니 빵이라든지 간식이라든



지 다함께 모아서 전달해 줍시다’ 한니까, 조합원들이 보급품 등을 다 모아서 올려 주고 여러 가지에 동참했어요. 그런 점가파업이 있었기에 지금과 같은 철탑 농성도 가능했다고 봐요.

오늘(11월 29일 비정규직지회 경고 파업)도 [정규직] 대의원들이 모여서 ‘비정규직 동지들이 파업을 하니 대체인력 투

입 저지 투쟁을 하자’고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동지들과 함께 대체인력 투입을 막아냈습니다.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도 ‘우리도 현장에서 싸울 수 있구나’ 하며 한껏 고무되고 더 큰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저도 함께해서 좋았죠.

‘비정규직 파업하는데 우리랑 무슨 상

관이나’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고 조직하는 것이 활동가의 몫이잖아요. 노동자는 하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변화는 시작된다고 봅니다.

인터뷰·정리 김기선
노동자연대다함께 울산지회 활동가
▶ 관련 기사 16면

공공운수노조·연맹 조상수 수석부위원장

“민영화 반대 투쟁 전선을 함께 만들어 냅시다”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말 레임덕 속에서도 의료·가스·공항면세점 등 민영화 추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 누가 되든 차기 정부도 다가올 경제 위기에 대처해 바통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다.

공공운수노조·연맹 조상수 수석부위원장에게 운동의 과제에 대해 들었다.

이명박 정권은 출범 초기부터 적극 민영화를 추진했습니다. 촛불시위로 국민적 반대가 높아지면서 ‘선진화 정책’, ‘경쟁체제 도입’ 등으로 선회했지만, 민영화 기조는 그대로입니다.

임기 말까지 집요하게 하는 것을 봐요. 경제자유구역법·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인천공항 면세점도 민영화하겠습니다. 역시 이명박은 기업 프렌들리 정권입니다.

민영화 추진은 특히 경제 위기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세계경제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정부 부채나 가계 부채도 늘었습니다.

이게 한계점에 봉착하면, 한국도 재정 긴축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한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약간 높다고는 하지만, 부채 증가율이 엄청나게 빠르게 늘고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들에겐 공기업 매각이나 민



사진 이미지

영화가 요구됩니다. 대선을 앞두고 좀 쉬어갈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든 차기 정부가 민영화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반을 쌓아 가는 이유죠.

물론, 지금 유력 대선 후보들은 표를 의식해 복지나 일자리 창출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정 긴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후보는 없습니다.

그러나 박근혜는 현 정부·여당을 계승하는 후보입니다. 민영화 기조로 갈 것이라고 봐야죠. 문제인은 KTX 민영화 등의 전면 재검토를 말했지만, 공공부문에 대한 총체적 정책 기조를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운수노조·연맹이 추진하는 ‘공공부문 서비스기본법’에 한참 못 미칩니다. 공공 인프라에 대한 민영화 금지와 재공영화가 필요합니다. 사회서비스공



사진 이미지

민영화 반대 투쟁은 전체 민중의 삶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투쟁이다.

단 형태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보육에서 노후까지, 늘어나는 사회복지 서비스도 담당해야 합니다.

변수

사실, 이번 대선에서 누가 당선하든 보수주의 또는 자유주의 세력이 집권하는 상황이죠. 이들은 기본적으로 ‘경쟁과 민간이 효율적’이라는 철학을 가졌고요.

복지를 축소시키고 민영화를 추진하고, 당연히 자본의 입장에서 이런 방향으로 가려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노동자·민중이 어떻게 투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계급투쟁의 역관

계나 정치적 역관계가 중요한 변수인 거죠. 경제 위기가 어떤 양태로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큰 위기가 닥치면 유럽에서처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2009년 이후 정부의 탄압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다시 투쟁에 나섰습니다. 대선이라는 점이 작용했지만, 일정하게 투쟁력이 복귀됐다고 봅니다. 모든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이 정부의 ‘선진화’ 지침에 규제를 당하다 보니, 함께 뭉쳐 싸워야 한다는 정서도 광범해졌습니다.

국민 여론도 좋게 작용했습니다. 민영

화 반대 여론은 높습니다. 워낙 양극화가 심하다 보니 공기업 ‘신의 직장’ 얘기도 일부 나오지만, 더는 잘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졌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민영화반대 집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12월 초에 범국민 대회를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 내 공공부문 노조들, 진보단체들과 함께 말이죠.

그동안 가스·철도 등 단위 노조별로 민영화 반대 투쟁을 해 왔지만, 이런 투쟁을 묶어 공공부문 민영화를 집중적으로 부각해 보자는 게 취지입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진보진영을 결집해 차기 정부까지 투쟁 전선을 이어갔으면 합니다.

이미 많은 국민이 민영화 정책의 폐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필수 공공서비스, 국가 기간산업을 재벌에게 넘긴다는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 안전·요금·고용창출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 악화될 것입니다.

민영화 반대 투쟁은 노동자·민중의 삶을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투쟁입니다. 더 나아가,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공공적 사회 운영의 흐름을 만드는 의미 있는 투쟁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나서 주길 바랍니다.

인터뷰·정리 박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가자 침공을 실패로 만든 아랍 혁명



혁명은 아랍 정권뿐 아니라 이스라엘도 떨게 만들었다고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전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이다.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1854년에 이렇게 썼다. “때때로 유럽의 이른바 5대 ‘열강’을 힘으로 압도하고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제 6의 세력이 유럽에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세력은 다름아닌 혁명이다.” 오늘날 중동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군사적 세력 균형만을 놓고 본다면 이스라엘이 최근 가자 지구를 상대로 벌인 전쟁에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듯 보일 수도 있다. 물론 하마스가 텔 아비브까지 도달할 수 있는 파르스-5 미사일을 보유하게 된 것이 달라진 점이지는 하지만, 그럼에도 군사력 면에서는 이스라엘이 여전히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사태를 군사적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피상적이다.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2009년에 가자 지구를 공격했을 때와는 상황이 1백80도 달랐다.

이스라엘의 자유주의 일간지 〈하레츠〉는 이집트 대통령 무르시가 제안한 휴전안을 놓고 이스라엘 정부의 수뇌(총리 네타냐후, 국방장관 바라크, 외무장관 리버먼)들이 고심한 과정을 다음과 같이 흥미진진하게 보도했다.

“미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이 도착하기 직전에 열린 화요일 회의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집트가 제안한 휴전 조건이 이스라엘보다 하마스의 입장에 훨씬 가깝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3인 회의에 배석한 정보부 관리들은 이집트가 무바라크 시절 때와는 달리 하마스를 편들면서 하마스의 지적 쌓기를 돕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바라크는 그때도 이스라엘 군이 하마스에게 본패를 보여 줬으니 그만 휴전을 받아들이자고 했고, 리버먼은 지상군 투입을 주장했다으며, 네타냐후는 결단을 못 내리고 있었다.

세 사람은 “좀더 공평한 휴전 합의안을 제시하도록 이집트를 압박해 달라”고 클린턴에게 요청했다. 그러나 클린턴은 세 사람에게 이집트의 조건을 받아들일 것을 종용했고, 오바마도 전화를 걸어 그렇게 요구했다.

결국 그들은 이집트의 조건을 수용했다. 초강경 우파인 리버먼조차 다른 각료들에게 이렇게 말해야만 했다. “라빈[이-팔 ‘평화 프로세스’를 개시했다가 암살당한 전 이스라엘 총리]은 가자에서 로켓이 날아오면 가자를 다시 점령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렇게 하기는 명백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집트

하마스가 승리로 내세운 만한 휴전을 무르시가 이끌어 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아랍 혁명이 있다. 가자 지구를 둘러싼 이번 전쟁은 아랍 혁명이 중동의 지정학 구도를 바꿔 놓기 시작했음을 보여 준다.

아랍 혁명 이후 네타냐후는 이스라엘의 우월한 군사력을 이용해 주도권을 되찾으려 해 왔다. 첫째 책략으로서 그는 이란에 맞선 전쟁(미국의 지원 없이는 실행하기 어려운)을 촉구했으나 측근들의 반발과 오바마의 제지에 부딪혔다.

네타냐후의 그 다음 꿈수는 가자 지구와 관련한 새로운 휴전 협정이 논의되고 있던 상황에서 하마스의 군사 지도자인 아흐메드 자바리를 암살한 것이었다.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저널리스트인 램지 바루드는 네타냐후가 롬니를 지지했음에도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안보 문제를 신임 정부의 최우선 의제로 부각시키는 것”이 이번 전쟁의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러나 막상 미국 지배자들의 시선은 아시아를 향하고 있었다. 이스라엘이 가자를 공격하는 동안 오바마는 버마를 중국으로부터 떼어 놓으려고 버마를 방문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그러므로 미국이 가장 피하고 싶은 사태는 중동에서 또 다른 전쟁에 휘말리는 것이다. 한편 네타냐후는 중동에서도 강력한 동맹국들을 잃었다. 이집트는 물론이고, 이스라엘과 군사 협정을 맺었던 터키도 돌아섰다. 터키 총리 에르도안은 지난주에 이스라엘을 “테러 국가”라며 비난했다.

그러나 무르시와 에르도안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다. 그들이 비록 이스라엘을 상징적·외교적으로 흠집 낼 용의는 있어도 안와르 사다트가 1970년대에 포기한, 이스라엘에 맞선 무력 투쟁을 재개할 용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특히 무르시는 이처럼 말에 그치는 제스처에 더는 만족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통치해야 하는 처지다. 최근 타호리르 광장 시위에서도 드러났듯이, 아랍 혁명은 무슬림형제단 같은 일개 정당의 당파적 이익에 맞게 길들여질 수 없는 역동적 흐름이다. 엥겔스의 말마따나 그것은 아랍권과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정권을 두려움에 떨게 한다. 심지어 혁명을 계승했다고 자처하는 정권도 예외가 아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2331호 / 번역 천경록



사진 제공하기 에브라함

라파 국경을 통해 가자로 들어간 이집트 활동가들 팔레스타인 해방의 문이 열리고 있다.

이스라엘은 왜 8일 만에 꼬리를 내렸는가

사이먼 아사프 레바논 출신 영국 사회주의자, 〈이집트 혁명과 중동의 민중 반란〉(책갈피) 공저자

11월 21일,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의 하마스와 휴전할 수밖에 없었다. 이스라엘은 ‘구름기둥’ 군사작전으로 목표했던 것을 얻지 못했다. ‘아랍의 봄’이 모든 상황을 바꿔 놔다. 첫째, 이집트의 상황이 바뀌었다.

2009년 초, 이스라엘은 ‘캐스트 리드’ 작전으로 가자 지구를 폭격하며 살육을 자행했다. 당시 이집트 노동조합 활동가와 반정부 활동가들이 의약품을 국경 너머로 전달하러 갔지만, 이집트 군부가 그들을 가로막았다.

그러나 지난 11월 20일, 이집트 활동가 수천 명이 라파 국경으로 달려가자 봉쇄가 사라졌다. 둘째는 이스라엘 공격에 대한 국제 사회의 반응이 바뀐 것이다. 터키는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가까운 우방이었고 서방에 온건한 세력으로 비춰지곤 했다.

그러나 공습 기간 중 터키 총리 에르도안은 “이스라엘은 테러국가”라고 선언했다. 그는 또 서방이 위선자라고 규탄했다. 이 이례적인 일은, 이스라엘이 휴전에 응하도록 만든 국제적 압력의 일부였다.

셋째는 ‘아랍 거리’의 분노였다. 2006년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침공했지만 결국 헤즈볼라에게 패배했다. 당시 아랍 거리를 메운 연대 시위는 이스라엘에게 위협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분노는 단지 위협적인 수준이 아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그게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지 묵도하고 있다. 2년 전 이집트인 6백만 명이 혁명에 참여했고 승리를 거뒀다. 그들은 무바라크 독재를 무너뜨렸고, 튀니지와 함께 중동 전역에서 반란을 이끌어 냈다.

오늘날 미국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놓고 공황상태에 빠졌다. 더는 의지할 중동 독재정부가 없는 것이다. 이집트와 튀니지, 심지어 카타르 정부까지도 주요 정치 인사를 가자에 파견했다. 이는 이스라엘의 막강한 군사력에 심각한 제약을 가했다.

혁명으로 가자 지구 봉쇄가 타격을 받았고, 이스라엘은 더는 혼자서 가자 지구를 봉쇄할 수 없다는 것이 이집트의 변화된 현실에서 드러났다.

이스라엘은 ‘구름기둥’ 작전으로 하마스를 고립시키고, 지도부를 봉괴시키려고 했다.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의 일상적 학대에 저항하는 것을 포기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그

러나 군사작전의 결과로 오히려 확인한 것은 제국주의가 위태로워졌다는 것이다.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은 이 와중에 뭘 하고 있었는가? 그들은 이스라엘을 응원하는 대신 한발 물러서도록 만들기 위해 무대 뒤에서 뽕종 나게 뛰어다녔다.

이집트 대통령 무르시는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인들에게 공개적으로 연대를 표시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일부 얻었다. 동시에 그는 휴전을 중재함으로써 서방에게도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집트 민중이 무르시에게 더 많은 압력을 가할수록 미 제국주의가 이집트 또는 중동전역에서 의지를 관철시키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휴전

결국 이스라엘은 멈추라는 말을 들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분쟁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휴전 선언 바로 다음 날 이스라엘 군대는 자신이 점령 중인 요르단강 서안으로 물러가 팔레스타인인 55명을 과격분자라는 이유로 체포했다.

이렇게라도 해서 자신이 강력하다는 것을 보이고 싶었던 것이다.

이스라엘은 2006년 레바논을 침공했지만 패배했다. 2008~09년 ‘캐스트 리드’ 작전으로 팔레스타인인 1천4백여 명을 살해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자 민중에 연대하는 물결이 일어나, 결과적으로 자충수를 둔 게 됐다.

이스라엘은 더는 자신에게 협력적인 아랍 세계에 있지 않다. 그리고 이집트는 더 깊은 급진화가 진행 중이다. 가자 공습 와중에 혁명가들은 수도 카이로에서 이집트 국가와 전투를 벌였다.

지난해 그들은 민중한테 권력을 넘기라고

군부에 요구했다. 1년 뒤 군부정권은 사라졌지만 시위대는 여전히 같은 구조를 외쳤다. “민중은 정권이 물러나기를 요구한다.”

이 사건은, 무르시가 이스라엘을 능숙하게 다루면서 일시적으로 대중적 지지를 얻었지만 여전히 기반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여 줬다. 가자 국경을 목표로 한 대규모 행진 같은 아래로부터 압력이 점차 커질수록 무르시는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외롭지 않다. 거대한 국제적 연대가 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는 다른 실용적 지원도 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한 많은 로켓포는 리비아에서 왔다. 리비아 저항세력은 독재자 카다피를 무너뜨리면서 정권의 무기고를 탈취했다.

2006년, 레바논의 헤즈볼라 민병대는 휴전 직전까지도 로켓포를 쏘았다. “우리는 패배하지 않았고, 여전히 응전할 수 있다”는 결의를 표시하려는 것이었다. 이번에 하마스도 똑같이 행동했고, 이스라엘 역시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다.

이스라엘의 ‘구름기둥’ 작전은 세계가 변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각인시켰다. 팔레스타인 해방의 열쇠를 천 아랍, 특히 이집트 민중은 자신의 힘과 권능을 깨달았다.

이스라엘 자신이 이길 것이라고 확신했던 전쟁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약점을 들춰냈다. 이스라엘의 뒤에 있는 미 제국주의는 역대 어느 때보다도 큰 압력에 노출됐다.

미국과 친구로 지냈던 아랍 독재자들이 아래로부터 운동으로 날아가면서 미국은 기떨 곳이 없어졌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2331호 / 번역 김중환

결정적 고비로 치닫는 시리아 혁명

최근 시리아 저항군은 제2의 도시 알레포에서 공군기지를 확보하는 중요한 군사적 승리를 거뒀다. 20개월 동안 4만 명을 학살한 아사드 정권은, 병사들의 이탈을 우려해 지상군 대신 전투기와 헬기를 동원한 폭격에 의존해 왔다.

저항군은 아사드의 핵심 거점인 수도 다마스쿠스로 진격을 준비 중이다. 아사드 정부는 다마스쿠스에서 인터넷을 끊고 최후의 발악을 준비 중인 듯하다. 이어지는 소식은 〈레프트21〉웹사이트에 올릴 예정이다.

김중환

이집트 민중 저항의 새로운 표적이 된 무르시

이슬람주의 대 세속주의 대립 구도는 진실이 아니다

주디스 오어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편집자

11월 말, 시위대가 이집트 전역의 광장을 가득 메웠다. 수만 명이 무슬림형제단 출신 대통령 무함마드 무르시에 맞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무르시는 사법부의 견제를 받지 않을 무소불위의 권력과 권한을 거머쥐겠노라고 선언했다. 이에 맞서 10만 명 이상이 카이로에서 행진했다.

카이로 중심부에 있는 타호리르 광장은, 혁명 기간 내내 그래 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저항의 중심이다. 11월 26일, 이집트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RS) 활동가 하렘 탈라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기에 수만 명이 나와 있고, 또 수천 명이 수에즈, 알렉산드리아, 포트사이드와 다른 도시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학을 비롯한 각급 학교 학생들, 독립 노조 소속 노동자들이 시위에 나왔어요. 녀 달째 파업 중인 의사들도 나왔어요. 무르시에 맞서 단결해 있는 것입니다.”

혁명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아무르 무사 전 외무장관 같은 무바라크 정권 출신 인사들과도 협력할 수 있다는 열여 둔다.

하렘은 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시위에 끼어들려는 일부 ‘잔당’들이 있어요. 다시 권력을 쥐고 싶어서 무르시를 반대하는 옛 무바라크 지지자들 말이에요.

“무함마드 엘바라데이나 나세르주의자 합단 사바히를 포함한 일부 정치인들이 그런 자들에게 협조해 왔어요. 하지만 ‘잔당’들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을 광장 밖으로 몰아냈어요.”

잔당

무르시는 자신의 권력을 굳히기를 원한다. 그는 최근 국제 무대에서 성공을 거뒀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휴전하도록 만든 것이 무르시라고 보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

그러나 이집트인 수백만 명은 더 많은 것을 원한다. 하렘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하루가 다르게 인기를 잃어 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르시가 자신을 대변할 것이라 생각해 무르시를 찍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경제와 정치 영역에서 무르시 정책의 진정한 본질을 깨닫고 있어요. 타호리르 광장에 나온 사람들 중 일부는 무르시를 지지했지만 이제는 무르시가 해 온 일에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어요.”

서방의 일부는 무르시의 이번 헌법 선언문이, 이집트에 이란과 유사한 이슬람 독재가 등장하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히려 혁명적 운동이 거리에서 보인 힘은 무슬림형제단이 아래로부터 어마어마한 압력을 받고 있음을 보여 준다.

혁명적 운동이 거리에서 보인 힘은 무슬림형제단이 아래로부터 어마어마한 압력을 받고 있음을 보여 준다. … 이집트의 평범한 대중은 더 나은 삶에 대한 그들의 열망이 혁명을 통해 실현되기를 바란다.

이란 혁명의 지도자로 등장해 이후 혁명을 파괴한 아야톨라 호메이니와 달리, 혁명의 정통성을 내세우려던 무르시의 시도는 현재 역풍을 맞고 있다.

이집트의 경제는 위기에 빠져 있다. 무르시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집트의 평범한 대중은 더 나은 삶에 대한 그들의 열망을 혁명으로 실현하기 원한다.

무슬림형제단이 정권을 잡은 지 첫 두 달 만에 파업이 1천 건가량 일어났다. 대부분은 선거에서 무르시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조직한 파업이다.

이는 무슬림형제단과 그들의 노동계급·빈민 지지층 사이의 긴장을 보여 주는 결정적 지표다. 사회 정의를 위한 투쟁과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연결하는 것이 이집트가 구체제로 화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관련 기사 11면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31호 / 번역 김인수



11월 27일 무르시의 헌법 선언문에 반대해 시위에 나선 마할라 노동자들

사진 출처 <http://massidentitynetwork.com/>

마할라 노동자들이 다시 혁명의 선봉에 서다

히삼 푸아드 이집트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 회원

이집트 마할라 지역 미스르 공장에서 일하는 방직 노동자 2만 명이 다시 한 번 이집트 정권에 맞선 투쟁의 선봉에 섰다. 그들은 대통령 무함마드 무르시의 헌법 수정안과 무슬림형제단의 지배를 거부한다.

노동자들은 11월 27일 시위에 나섰다. 시위대는 끔찍한 현실이 바뀌지 않고 노동자와 빈민에 적대적인 정책이 유지되는 것에 항의하는 구호들을 외쳤다. 노동자 행진에 많은 지역 주민과 혁명단체들이 “민중은 정권 퇴진을 요구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합류했다.

시위대가 도심 한가운데 있는 슈운 광장에 이르자 무슬림형제단의 자유정의당 당원들이 화약과 물건을 던지며 이들을 공격했다.

시위대는 벽돌과 화염병으로 맞서 싸웠고, 광장은 이내 전장으로 변해서 4백명 정도가 다쳤다. 얼마 뒤 도착한 보안

군은 최루탄을 수백 발 쏘아댔다.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RS)가 발표한 “이집트 노동자여, 헌법 선언문과 빈곤에 맞서 일어나라!”는 성명서가 시위대 사이에서 배포됐다.

성명서는 무르시가 노동자들의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 권력을 틀어쥐려 한다고 주장했다.

빈곤

이번 헌법 포고는 무르시가 노동자 운동 지도부를 처벌하고 대규모 해고를 단행했는데도, 노동자들의 유례없는 저항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나왔다.

이슬람주의자들뿐 아니라 자유주의자들도 헌법 초안을 작성하면서 노동자들의 요구와 권리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헌법 초안에는 의료, 교육, 임금에 관한 대중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

마할라 노동자들의 행동은 갈수록 나빠지는 생활 조건에 대한 분노를 현재 정치 투쟁과 연결시키는 중요한 연결고리

다. 최근 다른 노동자들도 정치적 요구를 내걸고 행동에 나서면서 이런 경향은 점점 뚜렷해졌다.

지하철 노동자들은 파업을 벌이며 감독관과 무바라크 정권 시절 인물들을 내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기업 노동자들은 재국유화를 요구했다. 신생 산업도시 노동자들은, 공장 문을 닫겠다고 협박하는 사장에게 맞서 공장을 운영하려고 싸워 왔다.

마할라 노동자들이 발휘하는 주도력이 다른 부문의 노동자들도 정치 투쟁에 참여하도록 이끌고 있다.

우리는 무바라크의 지배를 끝장내는 투쟁에서 노동자들이 어떤 구실을 했는지 기억해야 한다. 노동자 수십만 명이 파업과 연좌 행동을 벌여서 독재자가 겁에 질려 물러나도록 만들었다. 그들은 이집트 혁명이 기업가들의 지배에 맞선 대중 혁명으로 발전할까 봐 두려워했다.

이번 노동자의 힘은 노동자 국가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사회는 부를 사회적으로 재분배하고 공장과 토지를 민중이 소유하

는 것에 기초를 둔 새로운 사회일 것이다.

혁명가들과 그 중심에 있는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파업을 범죄시키는 무르시의 이번 헌법 선언에 맞서 노동계급 전반에 파업과 연좌 행동을 선동해야 한다. 혁명가들은 반민주적 헌법 수정안이 반민중적인 경제 정책과 연결돼 있다고 주장해야 한다.

그것은 국가 권력에 맞서 싸우는 광장 투쟁에 엄청난 힘과 영향력을 부여할 것이다. 노동 대중이야말로 생산과 서비스를 멈추고 정부가 정치적·사회적 요구에 응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우리는 무마라크에서 무르시로, 무르시에서 [친서방 세속주의자] 엘바라데이로 단지 폭대기에 있는 인물을 갈아치우기 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수의 요구에 맞춘 정책들을 원한다. 그리고 이는 수백만 노동자들이 구체제를 전복하는 정치 투쟁에 나설 때에만 가능하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31호 / 번역 김중환·김인수

이스라엘의 피 묻은 손과 악수해 온 한국 정부

한국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경제, 군사, 학술 등 여러 방면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만행을 묵인하거나 협조해 왔다.

한국은 이스라엘의 만행을 묵인하거나 거기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일을 하며, 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교류를 유지하거나 심지어 점령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한국과 이스라엘 간 교역 규모는 1990년대 들어 급격히 증가해, 2008년

에는 20억 달러에 달했다. 여러 한국 기업이 이스라엘 군수산업과 직접 거래하고 있으며, 현대중공업과 기아자동차, 두산인프라코어의 장비는 팔레스타인의 가옥을 부수고 정착촌과 검문소를 짓는데 쓰이고 있다.

가자 지구 공습 이후 발표된, 쏘스키와 지젝 등이 참여한 성명서는 한국을 “팔레스타인 자유를 걸로만 지지하는 부도덕한” 국가로 지목했다. 팔레스타인이 유엔 총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국가 지위를 부여받을 때도 한국은 미국의 눈치

를 보며 기권했다.

현재 한국과 이스라엘은 FTA 협상을 추진 중이다. 이 협상이 타결되면 한국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더욱더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될 것이다.

군수품

한국이 이스라엘에서 수입하는 물자의 양은 양국 간 전체 교역 규모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 중 대부분이 무기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은 이스라엘에서 약 4억 달러어치의 군수품

을 수입했다.

또 한국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을 살해, 학살하는 데 써 온 무인항공기와 미사일 등을 사들이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을 살해하는 데 쓸 무기를 만들 돈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그 규모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번 팔레스타인 공습에 핵심적 구실을 한 것으로 알려진 신허 방공 시스템 ‘아이언 돔’에도 한국은 군침을 흘리고 있다. 한국은 이스라엘에 조계함 네 척을

파는 대신 ‘아이언 돔’을 들여오는 거래를 추진 중이다.

이스라엘의 대학과 학술기관 역시 팔레스타인인을 억압하는 무기와 감시 기술 개발에 한 축을 맡고 있다. 한국 정부는 KAIST, KIST, 서울대 등을 선정해 이스라엘의 테크니온, 바이츠만, 텔아비브 등의 대학교와 교류하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이 대학교들은 군대나 방위산업체 등과 밀접한 연관을 맺으며 무기 개발 등을 통해 이스라엘의 점령 정책에 조력하고 있다.

강병준

이 글은 노동자연대다함께 **최일봉** 운영위원이 지난 11월 22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다함께의 한 포럼에서 발표한 연설문을 녹취·요약한 것이다.

경제 위기와 대선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아무런 직접적 관계도 없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래 1992년 대선과 1997년 대선, 2007년 대선이 경제 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1992년 대선은 집권당의 승리로 끝났고, 1997년 대선은 34년간 일당 국가 바깥에서 온갖 박해를 받던 야당 지도자가 승리했다. 그러가 하면 2007년 대선은 '7·4·7 경제 공약'을 내세운 이명박이 이겼다.

방금 나는 경제 위기와 대선 사이에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했지만, 간접적 관계도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 간접적 관계는 있다. 즉, **매개변수**를 도입하면 위기와 선거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보아도 된다. 그 매개변수 중 단연 가장 중요한 건 선거 직전의 사회 세력 관계고, 그것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당시의 **계급투쟁** 수위다.

1992년에는 노동자 운동이 일시 침체에 빠졌을 때였다. 첫째, 1989년 초 이래 혹심한 국가 탄압이 지속돼 왔다. 둘째, 1991년 강경대 타살(打殺) 사건의 여파로 5월 내내 '분신 정국'이 전개됐는데, 그 속에서 일어난 노태우 정부 하의 최대 항의 운동이 패배로 끝났다. 셋째, 1991년 8~9월 소련 몰락으로 당시 좌파는 사기 저하되고 방향 감각을 잃었다. 넷째, 1992년의 경기후퇴는 '전부적 노동조합주의'가 득세했던 당시 노동자 운동에 최초로 상당한 어려움을 안겨 줬다.

그래서 1987년 7~9월 노동자 대중 파업 때 '한국의 바벨사'로 불리던 권용목 씨는 1994년 〈말〉지 인터뷰에서 1992년이 '참 힘들었던 해였다'고 솔회했다.

이처럼 1992년 대선은 주로 노동운동이 곤란을 겪던 조건 속에서 치러지는 바람에 패배하고 말았다.

1997년 대선은 이것과는 다른 상황에서 치러졌다. 1996년부터 노동자 운동이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해 임금 인상 투쟁이 상당히 성공을 거두면서 노동자들의 자신감이 올라갔다. 그러던 때에 마침 김영삼이 터무니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1996년 12월 26일 국회에서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려는 악수를 두었던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1월 중순까지 대중 파업을 벌이며 대거 거리로 뛰쳐나와 항의 투쟁을 벌였다. 가장 많았을 때 37만 명의 조합원들이 청년·학생 등과 함께 '김영삼 퇴진'을 외치며 아주 격렬하게 시위를 벌였다. 그래서 김영삼의 공식 사과까지 받아 냈다.

1997년 노동운동이 이렇게 전진하던 터에 이번에는 'IMF 공황'이 찾아왔고, 마침 노동자들이 크게 사기가 올라 있던 상황이었어서 그것에 아주 잘 저항했다. 야대로부터의 저항에 직면한 지배자들은 자신들이 박해하던 야당 지도자(김대중)가 마침내 대선에 당선하는 것을 용인해 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최초로 야당이 승리했던 것이다.

2007년 대선은 진보진영 다수가 노무현에 대한 기대가 깨지면서 사기 저하했던 시기에 치러졌다. 2002년 40만 명이 참가한 촛불 집회의 주역인 청년들도 노무현 정권에 크게 실망하고 사기가 저하해, 역시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다. 청년들과 노동자들이 기권한 덕분에 이명박이 '7·4·7 경제 공약'을 걸고 집권했다.

올해 대선이 치러지는 더 큰 맥락

한 달도 채 안 남은 올해 대선은 어떤 결과로 나타날까? 올해도 경제 상황이 위기인 건 확실하다. 이전 어느 때보다 더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1997년 IMF 공황 때보다 덜 위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세계경제 상황이 더 어렵기 때문에 더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을 전망치를 두 차례나 하향 조정해 지난달 2.7퍼센트라고 발표했다. IMF는 이 전망치도 유럽 경제와 미국 경제의 호전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유럽과 미국 경제의 상황 변화에 따라 성장률은 더 하락할 수 있다고 암시했다.

그리고 세계 자본가들의 다양한 경제 연구소들이 한국 경제가 "앞으로 그동안 겪어 보지 못한 장기 경기침체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 그들은 수출 부진과 높은 가계부채, 고용 부진 등을 지적했다.

지금 노동계급 투쟁은 어떤가? 2008년 거대한 촛불 운동 후에 경제 공황이 찾아와, 노동운동이 부흥할 것으로 기대됐고, 실제로 2009년 초에 언론 노동자들의 저항부터 시작해 여름에 쌍용차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정점을 이루는 강력한 투쟁이 전개됐다.

그러나 그만 안타깝게도, 무지막지만 국가 탄압에 눌려서 쌍용차 노동자들은 패배를 겪었고, 그것 때문에 노동운동의 회복이 조금 지연됐다. 그러다가 올해 다시 상당히 회복돼, 노동정세가 이명박 정부 하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통계 수치가 있다.

그러나 노동운동은 자신의 정치적 표현을 이번 대선에서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1월 14일 "박근혜·문재인·안철수의 노동 정책 공약에 희망이 없다"고 발표했다. 물론 문재인이 공약이 그나마 다른 후보들보다는 더 구체적인 노동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철수의 공약은 '실망스럽다'고 했다.

그러니까, 조직 노동계급은 대선 후보 중 문재인을 일종의 '차악'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2002년 말 촛불 운동보다 훨씬 컸던 2008년 촛불 운동의 주역인 청년들도 비슷한 심정일 것이다.

따지고 보면 1990년대 이래 민주통합당(이후 민주당)은 언제나 차악이었다. 이 차악에 대해 조직 노동계급과 2008년 촛불 청년들이 '차악도 악은 악이다' 하며 투표장에 안 나갔지 아니냐? 그래도 최악보다 낫잖아' 하며 투표장에 나갔지는 지 궁금으로 알 수 없다.

둘아보면, 총선 전에 한미FTA 반대 투쟁과 제주 해군기지 반대 투쟁이 있었는데, 민주당은 이 투쟁을 배선했다. 국회로 등원해 버리고, '좋은 FTA가 있는가'하면 나쁜 FTA가 있다'는 헛갈리게 하는 소리를 하고, 제주 해군기지에 대해서도 '절차'는 잘못됐어도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또, 민주당은 김진표 같은 신자유주의 자들, 한나라당 출신자, 뉴라이트 출신 시스템이 작동했었고, 이 과정은 결국 지사상을 당할 때 자신들이 공천한 사람들이 데도 마녀사냥 당하도록 내용당이쳐 버렸다. 이 일은 급진개혁주의적 정서를 지닌 많은 청년들의 마음에 상처를 줬을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누가 당선해도 그 정부부는 세계경제와 제국주의 체제가 가하는 제약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때므로 지금부터는 경제 위기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그리고 그 위기의 부담을 자신들에게 전가하려는 것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의 투쟁 경험도 살펴봄으로써, 특히 유로존의 경우로



대선 전에 살펴보는

경제 위기와 대선 이후

경제적 요인 세계경제 위기

지난 5년간 경제 위기가 모든 정치 논쟁의 근저에 놓인 문제였다. 1930년대 대불황과 비교될 만한 이 위기는 40년에 걸쳐 세계 체제 전체의(평균적인) 이윤율이 낮았던 것의 결과다. 한동안 신용 확대로 정치 체제가 작동했지만, 이 과정은 결국 지속될 수 없었다. 지금 우리는 여러 해에 걸쳐 진행 중이던 위기의 결과를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 규모 세계 1위인 미국 경제는 성장이 여전히 매우 느리며, 실업률도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미국 인구 역시 명만 한 명도 5천만 5천만 명이 빈곤선 이하에서 살고 있다.

세계 2위인 중국 경제는 여전히 성장을 수출에 매우 의존하고 있고 수출 주도 분야들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 수준인데, 최근 수출 감소로 성장률이 감소해 왔다. 중국 경제가 정착됨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대선 이후 우리 나라 노동운동, 정치 정세 전반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 예측해 보겠다.

세계 3위인 일본 경제도 수출 의존 경제인데, 역시 수출 감소로 경기후퇴를 겪고 있다. 노다 총리는 상황이 '심각하고', 정부는 "위기 의식"을 갖고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고 솔직히 시인했다. 일본의 GDP는 5백37조 엔인데,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 GDP를 보면 1993년과 똑같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일본 경제는 전혀 성장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조금 성장하는 듯하면 금세 경기가 후퇴해서 수축하고, 또 성장을 하는 듯하다가 금세 수축을 하곤 했던 결과인 것이다.

이제 유로존을 살펴보자. 현재 유로존은 세계경제라는 "사슴의 가장 약한 고리"(데넨다). 이 지역의 비교적 취약한 경제들은 남부유럽의 경제들인데, 그동안 위기 속에서 그 경제들이 국가 채무를 쌓아 오면서 구조적 문제들이 드러났다. 그 구조적 문제들은 매우 다양한 경제들이 단일 통화(유로)와 단일 중앙은행(ECB)으로 묶였던 것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남부유럽에서 상황이 가장 심각한 그리스는 제2차 채무불이행(디폴트) 전망

이 너물거리고 있고,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그런데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의 경제 규모는 그리스보다 훨씬 커, 기존의 구조적 금융 기금으로는 구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유럽 지배계급들은 만일 스페인이나 이탈리아가 국가 부도가 난다면 유로화가 멸망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남부유럽 경제만 위험한 것이 아니다. 영·프·독 경제체처럼 더 강력한 경제들 앞에 놓인 전방도 유럽 지배계급들에게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독일은 그리스·포르투갈 같은 나라들의 부채 부담을 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유로존의 나라들은 총체적인 난국 속에 있다. 이러한 난국 때문에 유럽 지배자들은 서로 다른 위기 타개책을 내놓고 언쟁을 하고 있다. 게다가 자국 자본가들의 이익을 보호하려 에스드라는 논쟁은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유럽 금융 위기가 심각했던 지난해 11월에 프랑스 경제장관이었던 프랑수

아 바루앙은 최근 실토하길, 당시 프랑스 정부 관료들이 그리스·이탈리아와 함께 유로존을 탈퇴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어나야 한다. 첫째, 악성 부채가 심각돼야 한다. 둘째, 자본이 충분히 파괴되고 평가절하돼야 한다. '자본 파괴'를 쉽게 표현하면, 기업이 망해서 공장과 기계 설비류들이 헐값으로 다른 기업에 팔려가는 상황, 또 주가총액 지수가 단초락 나거나 3분의 1쯤으로 폭락하는 것 등을 가리킨다.

그렇게 자본이 파괴되면 이윤율이 올라간다. 왜냐하면 이윤율은 투하한 자본 대비 이익의 비율이므로 자본이 파괴되거나 평가절하되면 이윤율이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경제가 위기에서 회복될 수 있다.

전체적인 그림은 경제가 비교적 부진한 가운데 때때로 커다란 두려움과 불안이 자아내는 공황이 찾아오고, 막 땀뻘을 해서 한숨 돌리는 듯한 상황이 오면 또다시 공포의 공황이 오고, 그런데 이 간격은 점점 좁아지는 패턴인 것이다.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위기에서 회복하려면 이윤율이 회복돼야 한다. 그러려면 지배계급에게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 첫째, 악성 부채가 심각돼야 한다. 둘째, 자본이 충분히 파괴되고 평가절하돼야 한다. '자본 파괴'를 쉽게 표현하면, 기업이 망해서 공장과 기계 설비류들이 헐값으로 다른 기업에 팔려가는 상황, 또 주가총액 지수가 단초락 나거나 3분의 1쯤으로 폭락하는 것 등을 가리킨다.

그렇게 자본이 파괴되면 이윤율이 올라간다. 왜냐하면 이윤율은 투하한 자본 대비 이익의 비율이므로 자본이 파괴되거나 평가절하되면 이윤율이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경제가 위기에서 회복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그런 과정이 그다지 진척되지 않았다. 따라서 위기는 초기 단계일 뿐이고,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 위기가 계속됨에 따라 정치와 이데올로기의 위기와 혼란도 계속될 것이

올해 11월 11일 노동자대회



최악(박근혜)과 차악(문재인)

형성되고 그런 네트워크들이 투쟁을 발전시키는 데서 핵심적 구실을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리스는 위기의 영향으로 아래로부터의 분출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이 운동을 덕분에 시간이 지나면서 노동자들의 확산과 조직이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건축을 둘러싼 논쟁과 투쟁으로 정치적 양극화가 더 첨예해졌다. 많은 유럽 나라들에서 극우가 성장했다. 그래서 공공연한 나치 조직인 그리스 황금새벽당은 6월 선거에 7퍼센트를 득표했다.

마린 르펜이 총재인 프랑스 국민전선 FN은 대통령 선거에 6백40만 표를 얻었다. 동유럽에서도 극우 세력이 성장해, 2010년 헝가리 선거에서 조빅당은 15퍼센트 득표율을 기록했다.

우리 나라에서는 파시스트는 아니지만 매우 우익인 박근혜가 새누리당을 포함한 우파 전체를 결속시키고 있다. 한국에서는 중단기적으로 파시즘의 위험보다는 전통적 우익이 국가 기구의 권위주의화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극우의 위험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원곡에서도 위기의 수혜자가 있다. 좌측의 주요 수혜자는 많은 경우, 전통적인 개혁주의 정당이었다. 특히 그 정당들이 한동안 야당으로 밀려나 있었던 경우에는 더욱 그랬다. 가장 명백한 사례는 프랑스 사회당이다. 사회당은 대통령 선거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후보가 승리하고 총선과 지방선거에서도 승리를 거뒀다.

독일 사회민주당도 앙겔라 메르켈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커짐에 따라 봄에 독일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주인 북라인-베스트팔렌 주에서 완전한 과반수를 얻으며 다수당이 돼 부흥하고 있다는 징후를 나타내고 있다.

전통적 개혁주의 조직들은 최근 수십 년 동안 우경화했다. 그럼에도 조금 덜 사악한 버전의 건축 정책을 시행할 것처럼 보이면 그들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민주당이라는 포퓰리스트 부르주아 정당이 전통적 개혁주의 세력인데, 민주당이 10년 동안 집권하면서 지지자들을 배선했다는 사실을 새누리당과 박근혜가 심본 활용한 덕분에 민주당은 총선에서 패배했다.

그런데 전통적 개혁주의 세력만 부활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동시에, 그보다 좀 더 급진적인 세력도 그런 정당의 왼쪽에 있는 공간을 채우는 경우가 적잖아 있다. 프랑스 좌파전선의 장뤼크 멜랑송은 건축 반대, 부세제, 은행·에너지기업 국유화 등 좌파적 강령을 바탕으로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11퍼센트를 득표했다.

스페인 공산당이 주도하는 좌파연합은 여름 동안 13퍼센트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다시 그리스의 경우를 보면, 시라자 연합은 6월 선거에서 무려 27퍼센트의 득표율을 과시했다. 1970년대 이래로 유럽 속에서 노동자 활동가들의 네트워크가

파 정당은 없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중 통합진보당이 한때 지지를 20퍼센트 이상이라는 놀라운 기세로 민주당의 왼쪽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격심한 내부이라는 자살골로 통합진보당은 사분오열했고, 한국의 진보진영과 그 좌파는 전보다 더 복잡하고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절망적인 건 전혀 아닌다. 왜냐하면 기존 노동자들의 의식과 조직이 파괴된 것이 아니라, 상층의 정치 지도자들, 지도부들이 분열해서 노동자들이 방향 감각을 상실한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좌파적 개혁주의의 부상

서유럽의 좌파적 개혁주의 조직들은 주류 개혁주의 정당들의 건축 정책 지지(또는 절반만 반대)에 이의를 제기하고, 자기들은 거부하겠다고 공공연히 표방함으로써 지지를 얻고 있다.

따라서 그들이 좌파 정당임은 맞다. 하지만 개혁주의적이라는 점도 사실이 아니다. 가령 펠랑송은 칠레의 아네타 정부(1970~73)가 '너무 나아가는' 바람에 실패했다고 평가한다.

이런 좌파적 개혁주의 정당들은 전통적인 개혁주의 정당들보다 분명한 더 역동적이고 더 급진적이다. 그렇기는 해도 개혁주의라는 스펙트럼상에 있고 혁명적인 좌파는 아니라는 점도 봐야 한다. 이는 우리가 던져야 하는 두 가지 질문에 답변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나는 "그들이 반자본주의 투쟁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이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그들의 한계는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다.

첫째 물음에 답변해 보자. 그들은 아래로부터의 투쟁이나 적어도 그에 대한 염원을 반영한다. 그 조직들이 성공하면 노동계급의 확산과 기대를 높일 수 있고, 그래서 그들보다 더 폭넓은 전체 좌파를 강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력의 발전을 환영해야 한다. 한국에도 민주당 같은 포퓰리스트 부르주아 정당들의 왼쪽에서 건설했다는 진보 정당들이 몇 개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지지해야 한다.

왜 우리는 이런 움직임을 지지하고 어떤 경우에 개입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노동계급이 일단 펼쳐 일어섰기만 하면 자신의 전통적 조직에서 자동으로 벗어나 혁명적 좌파 쪽으로 끌려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환상이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유럽에서는 한국에서는 혁명적 좌파는 여전히 매우 작은 세력이기 때문이기도 하거나, 더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의 의식은 정치적 경험 없이 갑자기 비약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레온 트로츠키가 〈러시아혁명〉서 일부부분에서 지적한 점을 곱씹어 볼 만하다. 즉, 대중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 10면으로 이어짐

공동총파업 이후

계속되는 유럽 긴축반대 투쟁

유럽 지배자들한테 경제 위기를 벗어날 묘책이 없다는 사실은 최근 저들이 그리스를 두고 얼마나 머뭇거렸는지 보면 알 수 있다.

유럽 지배자들은 11월 12~13일, 그리고 다시 19~20일에 모여서 그리스 문제를 논의했지만 섣뚱 ‘구제금융’ 지급을 결론 내리지 못했다.

결국 한 달 사이에 세 번째 모인 26~27일, 10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야 마지못해 ‘구제금융’ 지급을 결정했다.

물론 유럽 지배자들은 ‘구제금융’의 대가로 그리스 노동자들의 허리띠를 더욱 졸라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회 긴축안 통과로 해고 위기에 놓인 그리스 지방공무원들은 유럽 공동총파업

이후에도 전국 2백50여 곳에서 지방정부 건물을 점거했다. 긴축이 낳은 양극화의 재앙적 결과인 파시즘에 반대하는 투쟁도 전진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정부가 긴축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면서 청년 실업률이 35퍼센트를 넘었다. 턱없이 낮은 예산 때문에 엉망인 교육 환경과,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는 현실에 항의하며 11월 초부터 학생들이 중고등학교와 대학 2백여 곳에서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점거 중인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농성 위원회를 구성해 물자를 조달하고 있다.

11월 24일에는 이탈리아 전역의 도시들을 멈추며 학생들과 노동자들이 마리오 몬티 정부의 긴축정책에 맞서 행진을 벌였다.

스페인 카탈루냐에서는 우파 집권정당이 분리독립을 요구하며 조기 총선을 치렀지만, 긴축을 추진한 전력 때문에 오히려 의석을 크게 잃었다(12석). 중앙정부 차원에서 긴축을 강요한 사회당과 국민당도 의석을 잃었다.

반면에 긴축에 반대한 카탈루냐공화좌파당은 11석, 녹색당과 급진좌파의 연합은 3석이 늘었다. 반자본주의 좌파인 대중연합은 3석을 확보하며 처음으로 지방의회에 입성했다. 그 지도자는 사회운동을 위해 “국회의 트로이 목마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유럽의 긴축반대 투쟁은, 다가오는 새 정부의 공격에 맞선 싸움을 준비해야 하는 국내 노동자 운동에 갈 길을 보여 준다.

김종환



사진 출처: theglobalmovement (블라키)

경제 위기의 대안은 긴축이 아니라 자본주의에 맞서는 투쟁이다. 이탈리아에서 학교를 점거한 고등학생들

▶ 9면에서 이어짐

개혁주의의 한계를 배워 나아간다. 트로츠키는 그것을 ‘근사치 조정 과정’이라고 표현했다. 점점 근사치에 접근함으로써 혁명적 입장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투쟁을 통해 스스로의 힘에 기밀 줄 알게 되기까지 그렇다는 말이고, 또한 신뢰할 만한 대안이 당기고 있어야 한다. 당기는 게 없으면 그렇게 급진화하다 멈출 것이다.

편집자 주 · 최일범이 인용한 《러시아 혁명사》 원문은 다음과 같다 : 혁명은 근본적으로 ... 한 계급이 사회 위기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을 점차 이해하는 정치 과정이다. 즉, 대중은 잇달아 근사치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능동적인 방향성을 갖는다. 혁명 과정의 서로 다른 단계는 더 극단적인 정당이 덜 극단적인 정당을 항상 대체하는 과정으로 입증된다. 좌파에 대한 대중의 압력이 증대되는 것의 표현이다. 물론 운동의 변동이 객관적 장애물을 만나지 않는 동안에는 말이다.

두번째 질문에 답변하려 한다. 개혁주의의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개혁주의는 자본주의를 전복하지 않고 기존의 기관들, 특히 국가 기구들을 ‘포획해’ 그 안에서 활동하면서 조금씩 개혁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래서 개혁주의는 자본주의의 체제가 제공할 수 있는 것과 자본주의 지배계급이 양보할 각오가 돼 있는 것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이러한 개혁주의의 한계 때문에, 아무리 좌파적 개혁주의일지라도 변화의 염원을 한동안 효과적으로 표현하다가 갑자기 지지를 잃을 수 있다. 독일의 좌파당이 근래 지지를 많이 잃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인 것 같다.

독일 좌파당은 창당 후 한동안 기대를 모았다가, 유권자들이 ‘정말로 저 당이 우리 처지를 개선시켜 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면서 ‘그럴 바에야 다시 전통적인 개혁 정당, 좀더 자원이 풍부하고 세력도 확고한 쪽에 기대는 게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결과, 최근에 사회민주당이 떠오르고 좌파당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인 것이다.

한국에서도 민주당의 왼쪽에서 건설되고 있는 진보정당들이 장차 좌파적 개혁주의로 떠오른다 하더라도 이럴 위험이 존재한다. 이미 우리는 2004~2006년에 그런 경험을 했다. 2004년에 노무현 탄핵의 역풍이 불어 서울에서만 25만 명이 거리로 나온 항의 운동 덕분에 그 직후의 총선에서 민주당(당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크게 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1년 뒤쪽에는 함께 하강해 버렸다.

물론 이번에는 그런 것은 아니었다. 이번에는 통합진보당 측의 자체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언제나 개혁주의 정당은 그럴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심지어 가장 괜찮은 시나리오를 그려봐도 좌파적 개혁주의자들의 집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가령 그리스 시리자가 지난 6월 선거에서 승리했고, 진정으로 긴축과 결별하러 했다고 가정해 보자.

승리 즉시 시리자는 그리스와 유럽의 지배계급들이 가하는 압박에 직면했을 것이다. 그리스와 유럽의 지배자들은 새 정부를 유럽연합·IMF·유럽중앙은행, 즉 트로이카의 의지에 굴복시키려 하거나, 그것에 실패하면 헌법적 수단으로든 비헌법적 수단으로든 그 정부를 제거하려 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아래로부터의 투쟁이 결정적인 것이며, 혁명가들이 이 투쟁 내

부에서 독립적인 요인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경우에 투쟁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한국도 긴축 예정

유럽의 경험에서 통찰을 얻었으니 한국으로 돌아와 결론을 내리자. 11월 8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회의실에서 경제정의실천연합 주최로 ‘정부 세제개편안 및 예산안 평가 토론회’가 열렸다. 거기서 시민경제사학회연구소 홍헌호 소장은 2013년도 정부 예산안 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은 사실상 긴축재정이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특히 복지분야 지출을 줄일 의도라는 지적이다.

그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이 같은 긴축 예산안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장기 국가채무 전망치를 과도하게 잡았다는 지적도 많았다.

경상남도, 울산시, 인천 부평구, 강원도 등 지자체들도 긴축재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꼭 국가나 지방정부의 공식적인 긴축 예산안이 아니더라도 임금을 깎거나 노동강도를 늘린대거나 대량 해고를 하는 것도 바로 내핍을 강요하는 것이다.

프랑스 사회당이 6개월 만에 긴축 예산안을 받아들였는데, 과연 박근혜나 문재인이 된다면, 박근혜는 3개월쯤 걸릴까, 문재인은 6개월이나 8개월쯤 걸릴까?

따라서 누가 되든 우리 노동계급과 피억압자들을 공격할 것이다. 거기에 대응해, 노동운동은 정치적으로는 정치 지도자들이 사보오열돼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기층의 조직이 건재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만 잘 강화하면’ 반격할 수 있다. ‘정치적인 부분’은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운동가들이 그런 움직임에 뛰어 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파시즘 반대 투쟁이 곳곳에서 승리한 그리스

조르고스 피타스 그리스 아테네에서

11월 24일 토요일 아테네에서 파시스트 황금새벽당에 맞서 세 차례 시위가 벌어졌다. 그리스의 다른 여러 곳에서도 투쟁이 진행됐다.

황금새벽당 당원 서른 명이 아테네 교외 엘라니코에서 행진을 시도했다. 그들은 전에도 이주민이 운영하는 가게들에 난입해 떠나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위협했다.

이 지역의 사회주의노동자당(SEK) 당원들이 이 상황을 알렸다. 30분도 안 돼 파시스트에 반대하는 1백50명이 모였다. 급진좌파연합 시리자 당원인 이 지역 구청장도 참가했다. 파시스트들은 행진을 할 수가 없었다.

황금새벽당 파시스트들은 또한 매우 상징적인 키텔리 지역에서 집회와 행진을 계획했다. 이 지역은 아테네에서 대규모 이주민 공동체가 처음 자리잡은 지역 가운데 하나다. 황금새벽당은 1990년대 말 공격을 받고 쫓겨나기 전까지 이곳에 당사를 두고 있었다.

반자본주의 좌파 조직 안타르시아의 지역 위원회는 많은 다른 단체들의 지지를 얻어 맞불 시위를 소집했다. 이 시위에 1천5백 명이 모였다. 파시스트들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경찰은 반파시스트 시위는 금지됐으며 광장 진입을 막았다. 하지만 우리는 광장에서 출발해 파시스트들이 행진하기로 했던 길을 따라 다음 지역까지 행진했다.

이주민과 그리스인 모두 우리를 보고 기뻐했다. 이날 아침에는 아테네 중심가에서 반파시스트 시위가 열렸다.

이런 시위들은 그리스에서 성장하고 있는 반파시즘 분위기를 보여 준다. 매주 황금새벽당에 맞선 맞불 집회들이 열린다. 황금새벽당은 자신들에게 투표한 사람들을 찾기 위해 여러 곳에 사무실을 열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어디를 가든 파시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황금새벽당을 막아서고 있다.

이주민

10월에 [1973년 군부독재에 저항한] 아테네 폴리테크닉 대학 봉기 기념행사가 열렸다. 황금새벽당은 학교로 들어가 봉기를 비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사들이 조직돼 이들의 진입을 막아서면서 황금새벽당원들은 학교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심지어 초등학교들이 만든 반파시즘 포스터들을 볼 수 있다. 내년 1월 19일 아테네에서 콘서트에 이어 전국 동원 시위가 열린다. 노동조합, 이주단체, 배우, 가수들이 이 시위를 지지하고 나섰다.

최근 선거에서 황금새벽당의 약진이라는 충격을 겪은 뒤, 황금새벽당에 대한 반대 분위기를 현실에서 느낄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이 분위기를 한 단계 더 전진시키려 한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2331호 / 번역 최용찬



사진 출처: Getty Images

혁명을 전진시켜 무바라크 정권의 잔당들이 혁명에 올라타려는 것도 막아야 한다. '파라오'에 반대해 30만 명이 모인 11월 27일 타흐리르 광장 농성촌

제2차 이집트 혁명을 위해

이슬람이 아니라 계급 갈등이 진정한 전선이다

사메 나기브 이집트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
지도적 회원

이집트 혁명이 결정적으로 승리하려면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온건파와 이슬람주의자들을 지지하는 대중을 혁명 정치로 획득해야 한다고 사메 나기브가 주장한다. 이 글은 이스라엘 가자 지구 공습과 무르시 반대 투쟁이 벌어지기 전에 쓰였다.

현대의 대혁명들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발전했다. 그것들은 보통 옛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일시적으로 단결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정권이 무너지면, 단결한 세력들은 자신이 대변하는 이해관계에 따라 분열했다. 새롭고 다양한 세력이 혁명에 참가할 뿐 아니라 옛 정권의 핵심 세력 중 일부가 반혁명을 조직했다.

국가 기구와 이 기구가 봉사하는 사회 계급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국가는 결코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가는 부와 진정한 권력을 통제하는 소수의 사람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변한다.

군대는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대기업과 사장 들의 이익을 보호한다. 단지 장군을 바꾼다고 해서 군대라는 기구의 성격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과 보안 요원도 국민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재산 제도의 유지에 힘쓴다. 행정 기관들도 다르지 않다.

의회는 유일하게 일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사람들로 구성되는 기구다. 그러나 의회는 진정한 국가의 소유자들에 맞설 힘이 없다.

이집트 혁명 덕분에 무슬림형제단이 권력을 잡았고 정권 수장을 바꿀 수 있었다. 그러나 무슬림형제단은 경찰을 거리로 돌려 보냈다. 교통 지도가 아니라 파업과 점거 농성을 탄압하고, 고문·살해와 테러 행위를 다시 자행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무르시가 집권하자마자 방문한 곳은 아랍 혁명의 발생지인 튀니지가 아니라 아랍 지역의 대표적인 반혁명 세력이자 억압적 왕조가 지배하는 사우디아라비아였다.

또, 그의 경제 '부흥 계획'에는 국가 개입으로 임금을 인상시키는 계획이 아니

라 IMF와 차관 협상을 맺는 계획이 담겨 있다.

IMF는 1990년대부터 이집트인들을 가난과 굶주림으로 몰아넣은 정책을 강요해 왔다.

무슬림형제단은 가자 지구의 고통에 연민을 표현하며 이스라엘의 봉쇄를 규탄해 왔다. 그러나 무르시는 가자 민중이 식량과 생필품을 반입하려고 이용하는 지하 터널들을 파괴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라파 국경을 완전 개방하지도 않았다.

가자 지구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집트가 이스라엘과 맺은 기만적인 평화협정]은 전 독재자 무바라크의 외교정책의 근간을 이뤘고, 그가 미국의 이익에 아합한다는 것을 보여 줬다.

그러나 무르시는 단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이 협정을 온전히 준수한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무르시 정부의 실패를 폭로하는 투쟁은 법원이 아니라 공장, 경작지와 빈민가에서 벌어질 것이다.

무슬림형제단과 이슬람주의자들은 보수적 포퓰리스트들이다. 그들은 옛 정권에 반대하면서도 타협해 왔다.

이슬람주의 경향들 내부와, 또 그들 사이에 커다란 모순이 있다. 그들의 부르주아 지도부와 중간계급 기층 활동가, 그리고 광범한 노동 계급과 빈민가 지지자들 사이에 엄청난 심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혁명의 지속 여부나 정당들의 사회적 강령 상의 차이 대신에 '세속주의 대 이슬람주의'란 차이를 중심으로 동맹들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 존재한다. 모호한 종교 구호들이 이런 모순을 감추는 구실을 해 왔다.

이슬람주의자들이 옛 정권에 계속 타협했지만,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상당수의 대중은 이슬람주의자들을 진정한 야당으로 여겼다.

따라서 혁명 직후 많은 사람이 이슬람주의자들에게 표를 던진 것은 당연했다. 민중은 하루아침에 일관된 혁명적 의식에 도달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슬림형제단과 강경 살라파주의자들의 당선으로 상황이 종료된 것이 아니다. 그들의 당선은 중간 단계일 뿐이다.

러시아 혁명이 발생하자 바로 권력을 잡은 것은 레닌과 볼셰비키가 아니라 개혁주의 야당이었다. 개혁주의자들은 혁명의 목표 중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했다. 볼셰비키가 노동자, 농민과 병사 위원회에서 다수가 되고 10월 대혁명으로 옛 정권을 몰아낸 다음에야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집트에서도 다수가 혁명적 계획을 지지하도록 만들려는 치열하고 끈질긴 노력과 함께 제2차 혁명이 필요하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이슬람주의자 주변에 있는 청중의 지지를 얻어야 하고 이슬람주의자들 지지층 내의 계급적 모순을 이용해야 한다. 이슬람주의 지도자들의 정책은 이런 과정을 촉진시킬 것이다.

따라서 이집트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선거에도 참가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참가하는 것은 의회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믿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무슬림형제단과 살라피주의자뿐 아니라 옛 정권 잔당과 자유주의자들을 폭로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하려고 선거에 참가한다.

이집트 혁명 초기에 많은 노동자가 개인적으로 시위와 광장 점거 등에 참가했다. 그러나 파업을 통해 무바라크를 제거하는 데 결정적 구실을 한 것은 조직 노동자들이었다.

이후 노동자 파업 물결의 깊이, 넓이와 의식이 모두 향상됐다.

우리는 이집트 혁명이 2011년 1월에 시작된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06년 마할라 노동자 파업이라는 중요한 투쟁이 벌어졌고 그것이 이후 다른 지역으

로 확산됐다. 이런 노동자 투쟁 전에는 팔레스타인 인티파다를 지지하고 이라크 침략에 반대하는 정치 시위들이 벌어졌다.

이집트 혁명은 정치혁명이자, 민주적 개혁 이상의 폭넓고 진지한 변화를 바라는 사회혁명이다. 지금 혁명 초기 이후 가장 치열한 파업과 점거 투쟁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 8월부터 10월까지 파업이 대략 1천 건 발생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이 제2차 이집트 혁명으로 발전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파업 물결은 아직 산발적이고 산업별, 분야별, 지역별로 파편화돼 있다. 이 파업들은 아직 이집트 노동계급 중 소수만을 대변하고 있다.

이 파업들을 연결하고 민주노조를 세우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이런 움직임은 아직 신디칼리즘의 틀에 갇혀 있다. 따라서 '빵과 버터'를 요구하는 경제적 투쟁은 혁명적 정치 요구와 분리되곤 한다.

신디칼리즘

그러나 무르시가 긴축과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경제 위기에 대응하려 하기 때문에 앞으로 노동자 투쟁이 격화될 것이다. 노동자 파업과 점거 투쟁이 계속될 것이고 경찰 탄압도 심해질 것이다. 이런 발전에 따라 다양한 혁명적 세력들이 변하면서 정치 지형도 갈수록 복잡해질 것이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혁명의 지속 여부나 정당들의 사회적 강령 상의 차이 대신에 '세속주의 대 이슬람주의'란 차이를 중심으로 동맹들이 형성되는 것이다. 실제로 아무르 무사[무바라크 정권의 외부 장관이자 아랍연맹 전 사무총장]와 아미만 누르[무바라크 시절 투옥됐던 야당 인사]의 주도하에 옛 정권 잔당과 자유주의자들이 '이집트민족동맹'이란 이름으로 힘을 합쳤다.

나세르주의 정치인 함딘 사바하가 대선 과정에서 창당한 민중경향,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엘바라데이의 헌법당, 그리고 아직 거취를 정하지 못한 기타 세력들이 있다. 한편에는 타감 무당을 포함하는 다양한 세력으로 구성된 혁명적민주동맹이 있다.

이들 모두에 맞서 무슬림형제단의 정당인 자유정의당과 살라피주의 동맹들이 있다.

이집트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미래의 정치와 선거 투쟁들에서 고립돼서는 안 된다. 이 투쟁들은 구체적이고 일반적인 정치 요구를 제기할 좋은 기회다.

우리는 공동전선의 원칙에 기초를 두고 전선과 동맹에 참가할 것이다. 우리는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특수하고 제한된 요구를 놓고 일시적으로 손을 잡을 것이다.

다가올 선거에서 옛 정권 인사나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들이 [이슬람주의에 맞선] '시민 세력'이란 이름 아래, 혹은 우익 자유주의자들과 손을 잡고 복귀할 것이다. 따라서 무슬림형제단 집권당과 그 동맹들에 맞선 투쟁이 왼쪽뿐 아니라 오른쪽에서도 벌어질 것이다.

우리는 절대로 세속주의 진영을 강화한다는 미명 아래, 극좌부터 극우까지 모든 세속주의 세력을 결집시키면서 사실상 옛 정권 인사를 복귀시키려는 세력과 손을 잡아서서는 안 된다.

이집트 혁명을 통해 지금까지 일어난 변화는 정치 권력의 변화였다. 옛 정권의 상징은 사라졌다. 그러나 국가와 군사 기구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집트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국가 기구를 분쇄하고 노동자와 농민의 국가를 세우는 혁명적 계획에 대한 노동자들의 지지를 획득해야 한다.

오늘날 많은 노동자가 여전히 우익, 온건파와 개혁주의 세력의 영향을 받는다. 우리는 반드시 노동자·농민의 지도자와 빈민 활동가, 천대받는 부문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우리의 혁명 조직 전통은 가장 중요한 무기 중 하나다.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흡수하고, 교육하고, 실천적으로 훈련시켜야 한다. 또, 국가 정보기관에 대응할 수 있는 강인함이 필요하다.

우리는 자유주의든 이슬람주의든 모든 우익 사상에 맞서 끊임없는 이데올로기 투쟁을 벌여야 한다.

전 세계와 이집트 자본주의는 붕괴하고 있고 이집트 노동계급은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기회는 흔히 오지 않는다. 우리가 제2차 이집트 혁명으로 전진하지 못한다면 반혁명이 승리할 것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2330호 / 번역 김용욱

기고 |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10년을 돌아보며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꿈은 패배할 수 없다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꼭 12년 전(2000년)이었다. 현대차 울산 3공장에서 자신이 일하던 공정이 사라진다는 이유로 잘릴 위기에 처해 있던 하청 노동자가 찾아왔다. 당시엔 비정규 노조도 없고 달리 도울 수단도 마땅치 않아 법적 구제책을 찾아보라 권했는데, 그는 이미 “노동부, 노동상담소, 노무사, 변호사까지 만나봤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하며 고개를 저었다.

며칠 뒤에 그는 같은 3공장에서 일하던 정규직 노동자들을 데려왔다. 함께 몇 년을 같은 콘베이어에서 일해 온 터라, 딱한 사정을 듣고 뭐라도 해보자는 마음이었다. 하고자 하는 이는 방법을 찾고 회피하려는 자는 구실을 찾는다 했던가? 대자보다 불이고, 선전전도 하고, 하청업체와 원청에 항의 면담도 해서 해고를 피할 수 있었다. 석·박사 출신들도 포기하는 일을, 그는 법적 구제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노동자 단결”이란 길을 찾아냈다.

하지만 그 해법은 오래가지 않았는데, 업체는 석달 뒤에 다른 사유로 또다시 해고하고 말았다. 우리의 노력은 그의 파리 목숨을 겨우 3개월 연장시킨 것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는 잊지 않고 우리를 다시 찾았다. 비록 잘렸지만 도와줘서 고맙다고,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으니 됐다고.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지 않겠냐고.

8년 전(2003년), 그러럼 “좋은 날”을 꿈꾸던 비정규직 노동자 1백27명이 울산에서 현대차비정규노조를 결성했다. “비정규직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것이 그들의 ‘소박한’ 꿈과 희망이었다. 정규직이 되면 인간답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의 꿈과 희망은 ‘정규직 화’로 집약됐고, 이를 위해 정말 열심히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들이 찾은 방법은 ‘불법파견’이었다. “파견법은 자본가의 법률일 뿐”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정말 열심히 뛰었다. 공장 곳곳을 돌고 쓰레기통까지 뒤져 가며 불법파견 증거를 수집했고, 교육·설문은 기본이요, 조합원 가입 운동



온갖 역경과 탄압을 딛고 비정규직 철폐의 꿈을 지켜 온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현대차 울산 공장 2차 포위의 날

도 맹렬히 펼쳤다. 2004년 마침내 노동부가 현대차 모든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임을 판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예상대로 불법파견 판정 이후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검찰은 불법파견 고발 사건을 2년이나 질질 끌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자본가의 불법 행위를 시정하라고 요구한 비정규직 노동자 2백여 명이 해고됐고, 류기형 열사는 노동 탄압에 항거하며 목을 매 자결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5년여 소송 끝에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에 해당하며 근속 2년이 넘는 노동자는 이미 정규직이라고 판시하기에 이르렀다.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드디어 “좋은 날”이 다가왔으며 노동조합으로 물려들었다. 노조를 만들던 처음에 이들은 막연히 정규직 되는 것이 “좋은 날”이라고 생

각했지만, 6~7년의 노조 활동, 자본과 정권의 탄압에 맞서 본 경험은 이를 좀더 구체화시켰다. “비정규직 없는 공장을 만들자!” “우리 아이들에게는 비정규직 명찰을 물려주지 말자!”

“좋은 날”

2010년 11월 15일부터 다시 한 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파업에 돌입했다. 울산 1공장 CTS(도어 탈착 공정)를 점거한 채 무려 25일간 생산을 멈췄다. 또다시 1백여 명이 해고되고 1천여 명이 징계를 맞으며 탄압 당하고, 수백억 원대 손해가 압류와 10여 명의 구속자가 나오며 파업은 패배했다. 그러나 이들이 내세운 ‘비정규직 없는 공장’이라는 꿈과 희망이 패배한 것은 아니었다.

지난 10년 동안 정권과 자본의 탄압은 이들을 의식적으로, 계급적으로 무장시켜 왔다. 불법파업에는 공권력을 투입하

면서, 8년 전에 노동부가 불법파견이라 판정한 자본에게는 절대로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는다. 현대차와 노동부는 “사내하청도 고임금”이라며 각종 증거를 들이밀며 정규직 대비 73퍼센트, 수천만 원 연봉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 똑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1백만 원 받고 누구는 73만 원 받아도 감지덕지 하란 말인가? 차별을 없애겠다고 만든 비정규법이 모조리 사기였음을 투쟁 속에서 몸으로 체득하기 시작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동부는 자본의 편일 뿐이라고, 비정규법·파견법은 자본의 법률일 뿐이라고, 이제 더는 교육할 필요가 없어졌다. 지난 10년의 경험은 이들에게 그 문제를 ‘상식’으로 만들어 줬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불법파견 정규직화”가 아니라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요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만장일치로 확정됐다.

이명박 정부의 첫 노동부 장관을 지낸 이영희 씨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은 사회주의 하자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나는 그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도 비정규직 없는 세상쯤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그의 말이 모종의 두려움을 표현한 것이라면,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슬로건 자체는 자본주의를 일부 개방함으로써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런 세상을 만들자는 운동과 열망, 그리고 이를 위한 노동자 투쟁 과정은 분명히 노동해방 새 세상으로 가는 다리를 놓아 주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소박한 꿈과 희망이었던 “좋은 날”이 ‘비정규직 없는 공장 만들기’로, 더 나아가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로 나아간다면, 그 꿈은 노동해방과 맞닿기 시작한다. 비정규직 없는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정규직만이 아니라 정규직과 굳게 손을 잡아야 한다는 의식이 싹트게 된다. “공장 내 모든 노동자들의 단결”이라는 단순한 진리는 점점 현대차 울타리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며 “모든 노동계급의 단결이 필요하다”는 사상으로 커 나간다. 그런 사상이 바로 노동해방 아니던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그저 소망해 보는 꿈이 아니다. 이처럼 소박한 꿈과 희망이었던 “좋은 날”이 ‘비정규직 없는 공장 만들기’로, 그리고 더 나아가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로 나아가기까지 무엇이 결정적인 구실을 했는가? 그렇다. 사회주의자를 비롯한 저들이 얘기하는 ‘외부세력’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결정적인 구실을 했다.

이 체제가 끊임없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차별과 억압·착취를 중단하지 않는 이상,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는 머지 않은 미래에 보편적인 노동계급의 ‘상식’이 될 것이다. 그것이 상식이 되는 날, 이 땅에 ‘비정규직’이란 단어는 박물관이나 고어 사전 등록을 기다리고 있지 않겠는가?

역사 돌아보기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박근혜 세력이 연루된 또 하나의 범죄

한규한 경성대학교 대학원 정치경제학과 역사 전공

마녀사냥이 뭘지 궁금하다면, 한국판 드레퓔스 사건이라 불리는 1991년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을 보면 된다. 당시 강기훈 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이던 김기설 씨가 분신할 때, 그의 유서를 대신 쓰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누명을 뒤집어썼다.

‘유서 대필 사건’은 1991년 4월 명지대 1학년생이던 강경대 열사의 죽음과 이를 계기로 폭발한 5월 투쟁과 깊은 관련이 있다. 당시 강경대 열사는 대학 민주화와 등록금 인상 반대를 위한 시위에 참가했다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백골단’의 야만적 폭력에 살해됐다.

강경대 열사의 죽음에 항의하는 시위는 5월 1일 메이데이를 거치며 견갑을 수 없이 확산하기 시작했다. 당시 고물가와 전세대란, 수서 비리 사건 등으로 민심도 노태우에게 완전히 등을 돌렸다. 한홍구 교수의 말마따나 “정권이 흔들흔들 했다.”

겨우 입학한 지 채 두 달도 안 된 신입

생이 잔혹하게 살해됐다는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찢어지게 했다. 분신이 연이었다.

분신 항거는 당시 사회의 위선에 대한 질문이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사회는 진정 민주화했는가? ‘시대에 역행하는 투쟁의 깃발은 이제 내려야 하는가?’ 노태우와 보수언론의 대답은 ‘그렇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눈에 강경대의 죽음은, 노태우 정부가 실은 민간인의 옷을 입은 군부독재였음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권력욕에 눈이 어두워 노태우 정권의 생명줄을 연장해 준 야당의 야합(김영삼의 3당 합당)은 기성 정치에 대한 환멸을 더욱 부추겼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함께 불기 시작한 이데올로기적 반동도 활동가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을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여전히 민주주의는 억압받고 있고 민중의 삶은 팍팍하지 않은가?’

저항이 커지자 지배자들은 마녀사냥으로 반격했다. “달라이 라마가 티베트인들의 분신을 사주하고 있다”는 중국 지배

자들의 역겨운 적반하장과 꼭 마찬가지로였다. 당시 한국의 지배자들도 “분신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세력이 있다”는 상상 초월의 엽기 소설을 떠들며 댔다(이들의 사악한 공상과 달리, 당시 운동 지도부는 “살아서 싸우자”고 분신 자체를 절절히 호소했다). 심지어 우익은 “제비뽑기로 분신 순번을 정한다”는 가공할 상상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서강대 총장 박홍은 “죽음을 선택하고 이용하려는 어둠의 세력이 존재한다”며 조종동과 우익을 기쁘게 해줬다. 이런 ‘어둠의 세력’의 ‘사주를 받은’ 검찰은 “분신 배후 세력 수사”에 나섰고, 강기훈 씨가 희생양이 됐다.

낙인

당시 검찰은 고(故) 김기설 씨가 “[고등학교를] 중퇴한 학력의 소유자로서 지식과 문장력이 부족”해 강기훈이 유서를 대신 써 줬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부모님께 효도를 못 했”으며, “아프게 살아가는 이 땅의 민중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했다는 취지의, 몇 문장 되

지도 않는 유서조차 고등학교 중퇴자(그러나 그는 검정고시에 합격했다)가 썼을 리 없다고 생각하는 검찰의 천박한 엘리트주의적 발상도 놀랍지만, 진정 놀라운 사실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하나도 없었다는 점이다.

거의 유일한 물적 증거는 국립과학수사대의 필적 감정뿐이었다.

그러나 각본과 결론은 이미 짜여 있었다. 반드시 운동권을 “동료의 생명까지도 혁명의 도구로 사용하는 비인간적 반인륜적” 집단으로 낙인찍어야 했다. 법원은 검사가 ‘대필’한 듯한 판결문을 가지고 강기훈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 후 시간은 20여 년이 흘렀다. 그동안 강기훈 씨는 세간의 편견에 시달리며 암을 얻었다. 강기훈 씨는 2007년 과거 사정리위원회 조사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고, 2009년 고등법원도 무죄 취지의 재심을 요청했다. 대법원은 차일파일 미루다 이제야 재심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의 재심 결정은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과거사위원회가 새로 발굴한 증거는 김기설 씨의 필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며 재심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심지어 검찰은 강기훈 씨가 조작했을 것이라고 망발했다.

결국 대법원의 메시지는 ‘사회 여론에 밀려 재심은 결정하지만, 최종 판정은 다음 정권에 가서 보겠다’는 것인 듯하다. 사실, 거의 ‘내전’ 수준의 좌우 격돌 끝에 무죄를 판결 받은 드레퓔스 사건 만큼이나, 강기훈 씨의 무죄 판결은 아직도 험난하다.

예를 들어, 그를 수사한 9명의 검사들은 승승장구했다. 게다가 이들 중 상당수는 현재 박근혜 캠프에 속해 있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김기춘은 정수장학회 장학생 모임인 상청회 회장을 거쳐 현재 박근혜의 ‘7인회’에 속해 있다. 강신옥은 2007년 박근혜 대선캠프 법률지원특보단장이었다. 광상도는 박근혜의 싱크 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이다. 남기춘은 박근혜 캠프의 클린검증 소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윤석만은 박근혜를 외곽조직에서 지원하고 있다. 여러 모로 박근혜 세력과 진실은 양립할 수가 없어 보인다.

소식·보고

소식·보고 면은 작업장과 대학 등의 투쟁 소식을 나누는 장입니다.
12월 12일(수)까지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Report@left21.com

되살아나는 유성기업 민주노조

“현장 투쟁의 힘을 맛보고 있습니다”



목에 밧줄을 두르고 40일 넘게 농성 중인 홍종인 지회장. 단호한 현장 투쟁을 벌여 조직력을 되살리고 있다.

사진: 채윤 (노동자연대학생그룹) / 변백성 기자

유성기업 사측은 노조파괴 전문업체 창조컨설팅의 지원을 받아 직장폐쇄와 친사측 노조 결성 등 악랄한 탄압을 퍼부어 왔다. 그런데 근래 에스제이엠의 승리 이후 유성기업에서도 희망의 불씨가 싹트고 있다. 양희열 유성기업 아산지회 정의부장이 작업장에서 살아나는 투쟁의 기운을 생생하게 전한다.

조합원들은 ‘우리가 지회장을 지킴’이라며 그 앞에 텐트를 쳤어요. 다들 환장한 게 뭐냐면, 지회장이 목에 밧줄을 걸었다는 거지. 누구든지 건드리면 뛰어내리겠다고 했거든요.

홍종인 지회장이 강조하는 게, 조합원들이 뭉쳐서 현장 투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회장이 올라간 직후에 생산1과에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야유회를 가면 사측이 차량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소속장(관리자)이 우리한테 못 주겠다는 거예요. 5월 야유회 때도 그랬으니까 우리가 또 그냥 넘어갈 줄 알았나 봐. 근데 이번엔 우리가 달라진 거지. 관리자에게 사과를 받아내야겠다고 마음먹은 거죠.

소속장은 죽어도 사과를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 조퇴를 해 버렸어요.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엔 생산1과만이 아니라 전체 조합원들이 모두 조퇴를 하고 나왔어요. 며칠 동안 생산이 제대로 안 되니까 소속장도 답답한 거죠.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또 있었죠. 우리 조합원들이 경고장을 몇 개씩 받았거든요. 사측은 우리가 경고장에 풀 줄 알았지만, 우리 관리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걸 찢어 버렸지.

뭉치면 된다

우리는 ‘경고 무효’를 요구하면서 또 일을 안 하고 자리에서 버텼어요. 그렇게 3일을 하니, 관리자들이 미치는 거예요. 결국 소속장은 두 가지를 약속했어요. 앞으로 이번 건과 관련해 절대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대기발령을 당한 두 사람을 복귀시키겠다.

우리는 느꼈어요. 어, 싸우니까 되네? 우리가 뭉치니까 재들도 두려워하는구나!

그 이후로 현장 분위기가 달라졌

어요. 처음 복귀할 땐 삼삼오오 모이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자유롭게 애기도 나누고 활개치고 다니죠. 관리자들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우르르 몰려가 따지고, 회사는 어용노조를 추켜세워 우리 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와 이번 주(11월 넷째 주)엔 한 차례씩 네 시간 파업도 했어요. 조합원들은 현장 투쟁의 힘을 맛보고 있습니다. 에스제이엠이 승리한 것도 무척 기쁘고 힘 나는 소식이었어요.

유성 사례를 보면서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사측이 복수노조 만들기 전에, 조합원들끼리 서로 칼 겨누지 않도록 막아야 해요. 투쟁을 버리고 정치인들에 기대고 사측이랑 타협하면 우리의 권리도, 민주노조도 지킬 수 없어요.

유성기업 투쟁이 승리한다면, 그건 우리만 이기는 게 아닐 거예요. 우리 투쟁에 금속노조가, 노동운동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정리 박설

인터뷰 전문은 <레프트21>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민대

학생들의 투쟁으로 성과를 얻어내다!

10월 25일에 열린 비상총회와 뒤이은 점거 농성으로 학생들은 ‘학교 측이 비상총회 12대 요구안에 대해 기말고사 2주 전까지 공개적인 방식으로 답변한다’는 약속을 받아 냈다. 그리고 11월 19일, 학교 당국은 <국민대신문>을 통해 답변을 내놓았다.

이번 답변은 지난 ‘총장남과의 간담회’ 때 학교 당국이 낸 안보다 진전된 것이다. 등록금 인하에 대해 학교 당국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따르겠다’고 답했다. 올해 정부 가이드라인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진전된 안인 것이다.

전임교원도 지난번의 77명보다 많은 1백 명을 총원하겠다고 답변했다. 시간강사의 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우리 학교가 중위권에 들어가려면 25퍼센트를 인상해야 하지만 너무 부담이 크므로 적정 수준에서 인상하겠다’고 답했다.

학교가 이만큼이라도 양보를 한 것은 명백히 비상총회와 점거농성을 통한 학생들의 투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총학생회는 ‘복약발전

위에서 논의하면 된다’며 투쟁을 회피했지만, 정작 이번 성과는 많은 학생들이 단호하게 싸워 얻어낸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다. 학교 당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내년 가이드라인을 따라 인하하겠다’는 등 답변은 여전히 모호하다.

그리고 학교 당국은 상대평가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스쿨버스 유료화도 여전히 양보할 생각이 없다. 자치권 보장, 이공계 예체능계 실험·실습·실기·재료비 등의 사용 내역 공개와 투자 확대, 문대성 논문 표절 본심사 결과 발표 등은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는 더 진전된 안을 얻기 위해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11월 20일 ‘부실대학 선정과 대학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국민대 학생대책위’는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투쟁을 결의했다.

권혁민 노동자연대학생그룹 국민대 모임

건국대

비리 총장을 비호한 김경희 이사장 물러나라

건국대학교에서 김진규 총장이 퇴진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신자유주의 대학기업화 정책을 추진하고 ‘비리 백화점’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던 김 전 총장은 사퇴하기 직전 성희롱 발원까지 해 학내 구성원들의 지탄을 받았다.

최근 건국대 내부 감사 결과 김 전 총장이 공금 3억 4천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는데, 이는 건국대 학생 83명의 등록금과 맞먹는 액수다.

그런데 김 전 총장 뒤에 있던 김경희 이사장은 감사 결과 드러난 김 전 총장의 비리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 이것은 지금까지 벌어진 문제가 단지 김 전 총장만의 책임이 아님을 김 이사장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실제로 얼마 전 ‘범건국인 비상대책위원회’(교수협의회, 노동조합, 동문교수협의회)는 김 이사장이 학교 재산으로 사리사욕을 채워왔음을 폭로했다. 김 이사장은 학교의 수익용 재산인 펜트하우스에서 2007년부터 무상으로 거주해 왔고, 추가로 9억 원의 경비를 들여 인테리어를 했을 뿐 아니라 매달 내야 하는

1백만 원 넘는 관리비까지 학교법인의 돈으로 납부했다.

노동자연대학생그룹 건국대 모임은 학내에 김 전 총장의 공금 횡령 사실을 폭로하고 이를 비호하는 김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학교 당국이 우리의 대자보를 떼어 버리는 기가 막힌 일이 발생했다.

우리는 이에 항의하려고 11월 28일 오후 학교 본관에 찾아가 성명서를 본관 곳곳에 붙여 버렸고, 확성기를 들고 성명서를 직접 읽는 퍼포먼스를 했다. 우리는 대자보를 떼는 일이 반복되면 이렇게 직접 와서 읽고, 현수막을 걸고, 집회를 하겠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일하고 있던 교직원들이 나와 우리가 하는 주장을 들었는데, 일부 직원들은 우리에게 박수를 쳐 줬다.

김 전 총장뿐 아니라 그 뒤에서 김 전 총장을 비호해 온 김경희 이사장이 이제 물러날 차례다.

김무석 노동자연대학생그룹 건국대 모임

공무원노조

고통전가에 맞서 투쟁을 준비하자

최근 <조선일보>는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으로 내년에 2조 원의 물량이 예산안을 편경계 부처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잘 모르는 것 같다”며 공무원연금 개악을 주문했다. 정부 예산도 “총수입에 비해 총지출 규모를 줄이겠다는 진척재정이다.”(참여연대)

이런 상황에서 올해 대선에 누가 당선하든 공무원 임금 인상을 쉽사리 들어줄 리 없다. 따라서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은 심화될 경제위기 속에 어떻게 싸울지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공무원노조가 투쟁에 나서면 쏟아졌던 ‘철밥통’ 비난 논리에 맞설 정치적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공무원의 임금 수준을 다른 부문, 특히 공공 부문 임금 인상 기준으로 삼아 왔고 사기업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데 활용해 왔기에, 공무원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는 항상 정치적 요구였다.

한편, 경제 위기 시기에 교섭만으로 임금

인상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쉽지 않다. 공무원노조 총회 때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노동2권을 인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온전한 노동3권은 반드시 필요하다.

공무원노조는 10월 20일 성공적인 총회 개최 이후, 전국노동자대회 때 실로 오랜만에 자신감 있게 규모 있는 대열을 이뤄 행진했다. 총회 이후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의 사기가 이전보다 높아졌다. 이럴 때일수록 임금 인상과 노조 인정, 해고자 원직복직, 정치표현의 자유 쟁취 등 6대 과제 실현을 위한 현장 활동을 강화하고 대중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당장의 투쟁도 방관해서는 안 된다. 특히,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각종 수당 삭감 등 실질임금을 삭감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며 투쟁의 근육을 키워야 한다.

박천석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사무처장

강원도 교육

민병휘 교육감은 중간·기말고사 폐지 약속을 지켜야

10월 26일 전교조 강원지부는 강원도교육청과 ‘2012단체협약’(이하 단협)을 체결했다. 이번 단협 내용에는 민주적 학교 운영, 교원법정정원 확보와 기간제 처우 개선, 초·중·고 교육과정 정상화 등 매우 혁신적인 안이 포함돼 현장 교사들에게 환영을 받았다.

특히 “초등학교 중간 및 기말고사 등 일제 형식 평가 폐지”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창의적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내부형 일제고사(한 학교에서 한날 한시에 같은 문제로 보는 시험)를 철폐시킬 절호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원도교육청은 11월 16일 이 내용을 담은 공문을 학교에 보내 기말고사 준비를 중단시켰다.

그러나 교총 소속의 몇몇 교장들이 강원도교육청에 거세게 반발했다. 그러자 강원도교육청은 곧바로 입장을 바꿔 “2012년 평가는 학기 초에 수립

된 계획대로 실시하라”는 수정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전교조 강원지부는 수정 공문을 철회하고, 단협 위반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27일부터 교육청 앞에서 1차 농성에 돌입했다.

초등학교의 중간·기말고사 등 일제 형식의 평가는 본래 과정 중심의 수시평가를 지향하는 초등학교의 교육 기조에 어긋나는 행태다. 이러한 평가는 가르친 교사가 평가할 권리를 밀어내고, 경쟁교육을 강화시킴으로써 초등학교 교육까지 입시교육의 연장선으로 만들어 버렸다.

전교조 강원지부 함은서 사무처장의 말을 빌려 이번 진보교육감의 후퇴에 대한 두 가지 요구안을 제시해 보겠다.

첫째, ‘행복 더하기 학교’라는 혁신학교 성과를 내세우는 강원도교육청이 초·중·고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내부

형 일제고사를 폐지하는 것은 당연한 조처다. 이를 거스르는 것은 그 성과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강원도교육청은 수정 공문을 철회해야 한다.

둘째, 단협은 교육청과 전교조의 약속이고,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다. 불과 한 달도 안 돼 단협을 파기하는 행위는 앞으로 함께할 교육 개혁을 위해서 있어선 안 되는 일이다. 노조의 단협은 진보적 현장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기에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번 사태는 아무리 진보교육감이라 할지라도 노동조합을 비롯한 현장의 기층 세력이 조직화 해 압력을 넣지 않으면 교육 혁신을 온전히 이룰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줬다. 전교조 강원지부의 끈질긴 투쟁을 통해서만 단협을 실현시키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다.

서지애 전교조 조합원

소식·보고

소식·보고 면은 작업장과 대학 등의 투쟁 소식을 나누는 장입니다.
12월 12일(수)까지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Report@left21.com

하창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지회장 인터뷰

“목숨을 지키며 일할 권리를 요구한다”

9월 17일 아침, 고(故) 황충철 씨가 현대중공업의 한 탈의실에 쓰러져 있었어요. 현장 소장을 불러 트럭에 실어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얼마 안 돼 사망했죠. 사인은 심근경색. 5분이면 오는 구급차를 불렀다면, 병원 가는 길에 산소 공급이 됐다면, 사망만은 막았을 거예요.

산재 사고는 임원들이 진급하는 데 장애가 됩니다. 때문에 하청업체들은 알아서 기죠. 119가 출동하면 보고가 올라가니까, 119를 안 부르고 트럭에 싣고 가는 거고.

현대중공업에선 산재 은폐 자체가 일상화됐어요. 내가 현장에 있을 때도, 철판에 부딪혀서 척추·골반 골절을 당한 사람이 똑같이 트럭 뒷자리에 구겨 넣어졌어요. 오로지 숨기기에 급급하니까 사태가 악화되고 치료 기간도 늘어나죠.

산재 신청을 하는 하청 노동자들은 해고를 각오해야 해요. 사측이 개인의 책임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자비로 치료받는 경우도 술하고, 정규직도 다를 게 없어요.

노동부와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도 산재 은폐를 부추깁니다.

7월 2일 사망한 고(故) 최승호 씨의 경우, 검찰은 사고적부에 기록이 있는데도 자꾸 시간을 끌었어요. 시끄러운 여론이 무마되기를 기다렸던 것이죠. 5월 30일 사망한 고(故) 강석봉 씨도 좁은 파이프 안에서 안전 장치 없이 일하다 질식사했는데, 원인은 ‘미상’으로 나왔어요.

노동부와 검찰은 현대중공업의 눈치를 봐요. 업체들은 과태료 몇 푼 내면 되고, 원청은 하청업체에 책임을 다 미루고, 사망사고가 나면 빨리 장례 치르고 원인을 흐트리죠. 검찰도 공조해 부검을 질질 끌고 원인 미상, 개인 질병으로 결론짓고요. 책임자 처벌도 없습니다.

산재 신청률은 줄었는데 오히려 사망 재해율은 높아졌어요. 그만큼 산재 은폐가 심각해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하창민 지회장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무엇보다 노동조합이 튼튼해져야 한다고 말하는 하창민 지회장

자본은 노동 유연성을 얘기하며, 하청업체와 물량탐을 확산시키고 있어요. 물량탐은 다른 사람의 출입증 가지고 공장에 들어가니까 신원 확인조차 안 되고, 3·4차까지 다단계식으로 하청이 내려가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지난해 세진중공업 폭발 사고로 물량탐 네 명이 죽었고, 10월 31일 대불산단 폭발 사고로 죽거나 다친 이들도 물량탐이에요. 여기에는 이주노동자들도 포함됐죠.

우리는 산재를 고발하고 알릴 것입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기업살인특별법 도입, 자율안전관리제도 폐지와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해요. 무엇보다 노동조합이 튼튼해지는 게 제일 중요하죠.

조선소 노동자들은 불안한 고용과 저임금도 모자라,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어요. 정말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해요. 목숨을 지키며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요구하는 투쟁을 확대해야 합니다.

인터뷰·정리 김진석

인천대

77퍼센트가 법인화 추진 유보를 지지하는 표를 던지다

11월 27~28일 법인화 유보에 관한 1만 학우 총투표가 진행됐다. ‘빈털터리, 빚더미 법인화를 그대로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 ‘제대로 된 국립대가 될 때까지 법인화를 유보시킬 것이냐’ 하는 기로에서 학생들은 법인화 추진 “유보”에 77퍼센트의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졌다.

법인화 법안이 시행되기까지 불과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과 교·직원 들은 법인화에 대해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허울 좋은 ‘국립’이라는 이름 빼고는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국공립대는 고사하고 사립대와 비교해도 인천대는 정상적인 재정 지원을 받지 못했다. 또, 인천시는 공문서로까지 약속한 9천4백억 원가량의 재산 지원과 13만 평의 부지 제공을 이행할 의지조차 없다. 인천대 캠퍼스는

비좁아 터지지만, 약속했던 건물 신축은 첫 삽도 뜨지 않고 있다.

이에 분노한 인천대 총학생회, 교수협의회, 총동문회, 공무원노조 등은 ‘인천대 법인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고, 11월 21일 인천시를 규탄하는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비대위’는 인천시의 지원 약속 내용을 조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인천시 당국은 재정난 얘기만 영무새처럼 반복하며 요구를 거부했다. 아시안게임, 세계도시축전 등으로 재정을 파탄 내고는, 왜 그 책임을 학생과 대학 구성원들이 짊어져야 하는가?

인천대 총학생회는 이날부터 인천 시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그러나 인천시 당국은 법인화 반대 분위기를 잠재우려고 11월 29일 경찰력과 공무원을 동원해 농성장을 강제 침탈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물론 이것은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천시와 꼭 마찬가지로 무늬만 ‘국립’이라 칭하고 재정 지원은 회피하는 정부 당국도 지탄받아야 한다. 인천시 부채 비율이 40퍼센트에 육박한 상황에서 당연히 ‘국립대’라면 국가가 재정을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최근 인천대 제 구성원들의 투쟁이 본격화되자, 국회 교과위는 2백50억원의 국립법인 예산 지원을 서둘러 통과시켰다. 그러나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인천대 국립법인 전환 과정에 국가 재정 지원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제대로 된 ‘국립대’를 열망하는 학생들과 제 구성원들의 항의 행동이 지속돼야 한다. 지난해처럼 법인화 유보 투표 이후에 뚜렷한 행동 없이 흐지부지된 것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박한솔 노동자연대학생그룹 인천대 모임

서울시립대 청소·시설 노동자 투쟁

부당 지시와 폭언이 업무 특성 상 불가피하다고?

서울시립대 청소·시설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자, 학교 당국은 초단기계약 노동자들의 계약 연장과 휴게실 다섯 곳 증설, ‘노동안전실태조사위원회’ 구성을 약속하며 한발 물러섰다.

자신감을 얻은 청소·시설 노동자들은 나머지 요구들을 따내려고 학생들과 함께 ‘비정규직 없는 서울시립대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총장님, 밥 한 끼 먹읍시다!’ 등의 행동을 조직하며 학교 당국을 압박했다.

점심시간을 이용한 이틀간의 짧은 캠페인이었음에도 3백 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서명에 동참했다.

최근 학교 총무과 직원의 어처구니 없는 망발은 청소·시설 노동자들의 투쟁에 기름을 끼얹었다. 그동안 노동자들은 부당 지시와 폭언을 일삼아 온

원청 관리자의 교체를 요구해 왔는데, 총무과 직원이 원청 관리자의 횡포가 “업무 특성 상 불가피한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아니 도대체 세상 어디에 업무 특성 상 욕먹고 일해도 되는 사람과 직업이 있단 말인가!

이에 노동조합은 총장 항의 방문을 진행했다. 예상대로 총장실 문은 굳게 잠겼고, 직원들은 노동자들을 밀치고 잡아끌면서 가로막았다. 곧바로 청소·시설 노동자들과 총학생회, 교지편집위원회 《대학문화》,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서울시립대 모임 학생들은 총장실 앞 복도에서 연좌하고 총장 면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총장은 끝내 얼굴을 비치지 않았다.

총장 대신 면담을 하겠다고 나선 총무과장은 총무과 직원의 망발에 대해 발뻘하기 급급했다. 원청 관리자가 노

동자들에게 부당 지시와 폭언을 한 것을 일부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교체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 회피했다.

한편, 노동조합이 요구한 총장과의 면담, 직고용과 고용보장 문제, 용역업체의 교섭 태도 문제 등에 대해 총무과장은 “더 기다려 달라”는 말만 늘어놓았다. 노동자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하며 분노했다. 그리고 12월 4일까지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 당국이 그때까지 분명한 대답을 내놓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의 더 큰 투쟁에 직면할 것이다.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서울시립대 모임도 더 많은 학생들과 함께 청소·시설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할 것이다.

오동환 노동자연대학생그룹 서울시립대 모임

독자토론광장

12월 12일(수)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눈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다. 지면이 넘쳐 실지 못한 독자편자는 본지 웹사이트에 실습니다.

Letter@left21.com

교육을 망치는 중간·기말고사는 없어져야

초등학교 5학년 개구쟁이들과 함께 지내는 나는 요즘 수업이 곤욕스럽다.

기말고사 진도 맞추는 것 때문에, 학생들과 다양한 활동을 하며 즐겁게 수업하던 기억은 저 멀리에 가 버렸다. 교과서 페이지 수를 세며 울며 겨자 먹기로 총형무진 칠판을 달리는 내 심정은 학생들이 시계만 보는 심정과 별반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오늘 국어 시간에는 여성 사회운동가 메리 울스턴크래프트 이야기를 하면서 청소년 참정권 운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 학생들은 하나같이 투표권이 주워지면 일제식 시험을 철폐하는 교육감, 대통령을 뽑을 거라고 율문을 토해 냈다.

초등학교에서 기말고사와 같은 내부형 일제고사(한 학교에서 한날한시에 같은 문제로 보는 시험)는 사교육비를 증가

시키고, 학생들이 공부를 더 기피하게 만드는 무서운 존재다. 6년 동안 한 번 보는 국가학업성취도 평가보다 내부형 일제고사가 더 큰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

사실 현장에서는 상시적으로 서술형 평가를 볼 수 있게 돼 있고, 최근 진보교육감이 집권한 지역에서는 이를 더욱 강조하는 추세다. 서술형 평가는 학생의 사고 발달을 도모하고, 상시적으로 평가하기에 교사·학부모의 의사소통과 상담에 좋은 자료가 되며, 교사의 교육 활동에 피드백을 주는 장점이 있다.

물론 아직 내부형 일제고사와 서술형 평가가 공존하고 있어 온전한 교육적 효과를 누릴 수 없고, 위로부터 실시되는 제도가 늘 그렇듯 교사의 평가권보다는 ‘서술형’이라는 외형의 확대에 치중하는 문

제는 확실히 있다.

하지만 광노현 전 교육감이 집권하면서 많은 학교에서 내부형 일제고사를 폐지한 서울의 사례를 보면, 기말고사로부터의 해방은 초등학교 현장을 교사와 학생 중심으로 옮겨 놓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정상화

서울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은 시험 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했다.

“내부형 일제고사를 없애서 자율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사 재량권이 확보됐어요. 물론 처음에는 보수적 관리자나 학부모 들, 지침을 오해한 교사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안착되면서 오히려 교육 활동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학생들의 스트레

스도 줄어 여러모로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입시 경쟁에 찌든 교육 현실에서, 평가 제도는 학교 교육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일제형 평가를 폐지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입시 교육’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에서 빠져나와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전교조 강원지부의 ‘초등학교의 내부형 일제고사 폐지’ 단체협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보수진영의 반발로 인한 진보교육감의 후퇴가 이런 진보적 성과를 좌초시킨 것은, 그만큼 더욱 강하고 결집된 기층 현장 교사들의 투쟁이 필요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서지애 초등학교 교사

위기의 자본주의,
그 대안을 찾는 토론 공간

노동자연대다함께 포럼에 초대합니다

주최 | 노동자연대다함께
www.alltogether.or.kr

* 웹사이트에 포럼 일정을 수시로 업데이트합니다.
* 참가비는 장소 대여 등에 사용됩니다.

서울 동부지구

의료, 철도, 가스 민영화...
경제위기, 민영화 그리고 대선

연사 : 우석균(보건료단체인연합 정책실장,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지원위원)

일시 : 12월 6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건대입구역 6번 출구) 3층 2강의실

참가비 : 3천 원(학생 2천 원)

문의 : 010-9453-5318, 010-5731-7299

정정합니다.

지난 호에 실린 <당과 계급 : 노동계급에게는 어떤 정치조직이 필요한가?> 서평 7번째 문단에서 ‘노동계급이 패배했다’는 “노동계급이 ‘미숙해서 패배했다’는”으로 수정합니다. 제작 과정의 실수로 ‘미숙해서’ 라는 단어가 잘못 삭제됐습니다.

11·29 현대차 비정규직 경고 파업의 성공

원·하청 연대를 더 강화해 정몽구를 무릎 꿇리자

11월 29일 울산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체인력 저지 경고 파업이 성공을 거뒀다. 이 투쟁에 참가한 투사들이 각 공장 투쟁 소식을 한껏 고무된 어조로 <레프트21>에 전했다.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백여 명과 정규직 대의원 30여 명이 함께 라인을 순회하며 대체 인력을 끌어냈다. 사측이 관리자 1백50여 명을 동원해 막아서자 실량리와 몸싸움이 있었지만, 통쾌하게도 그들을 물리쳐 2시간 동안 라인이 멈췄다!”(현대차 1공장 정규직 대의원 박성락)

“예상보다 더 많은 조합원이 함께했다. 파업 동참을 망설였던 일부 조합원들은 ‘현장에서 싸울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얻은 것 같다. 이전과 달리 정규직 대의원들이 나서서 사측 관리자들이 라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밀어내기도 했다.”(현대차 비정규직지회 3공장 대표 정의동)

“비정규직 동지들 90여 명과 스타렉스 공장 정규직 대의원 5~6명이 라인 공정을 순회하면서 대체인력 저지 투쟁을 벌였다. 이 때문에 41부 조립라인이 멈췄다. 돌다를 반복했다. 포터 공장에서는 대체인력 저지를 위해 젊은 정규직 조합원이 라인을 정지시키기도 했다.

“비정규직 조합원들과 나는 정몽구를 구속하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힘이 절로 솟았다. 우리는 라인 통로를 휘젓고 다녔다!”(현대차 4공장 정규직 활동가 정동석)

“사측은 조합원이 일하던 공정에 비조합원이 일하게 했는데,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 사측과 실량리가 벌어졌다. 그런데 정규직 대의원이 우리를 거들어 줘 라인을 세울 수 있었다. 내가 머리털 나고 처음 있는 일이다.”(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엔진변속기 대의원 박용희)

이날 울산 1공장은 두 시간 동안 의장 라인이 완전히 마비됐다. (8월 14일 원하청 공동 대체인력 저지 투쟁 때는 라인 하나만 멈췄다.)

다른 공장에서도 라인이 “가다 서다”를 반복해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 예상치를 뛰어넘는 결과다. 연대투쟁의 전통이 있고 전투적인 정규직 활동가들이 포진한 울산 1공장뿐 아니라 다른 공장에서도 투쟁이 성공을 거둔 것이다.

투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파업에 참가했다고 말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3공장 성만용 대의원은 “나와 같은 조 조합원이 파업에 참가한 것은 10년 만이다” 하고 작업장 분위기를 전했다.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올해 투쟁이 최고조로 올랐던 8월 중순보다 참가 인원이 더 늘었다.

최병승·천의봉 동지의 목숨을 건 철갑 농성과 공장 바깥에서 정치적 연대를 확산하려는 운동이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높인 것이다. 게다가 사측이 부분적으로 후퇴한 것도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준 듯하다.

사측은 강성용 수석부지회장을 폭행하고 관리자를 대거 동원해 파업을 짓누르려 했지만, 사실상 속수무책이었다. 파업 참가 인원이 늘어나고 울산 공장 전체에서 투쟁이 벌어지면서 역부족이 된 것이다.

11월 29일 투쟁의 매우 중요한 특징은 바로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다. 라인을 세우는 데 정규직 대의원들의 구실이 중



사진 제공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사측 관리자들을 물리쳐 2시간 동안 라인이 멈췄다.” 비정규직 파업과 정규직의 연대가 결합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요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적극 투쟁에 나서고, 정규직이 연대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정몽구 일당은 사실상 불법파견을 인정하며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여전히 ‘최병승 1명만 정규직으로 신규채용’이라는 가당치도 않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의 요구인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을 ‘개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현대차 정규직지부 지도부의 ‘최병승 정규직 고용,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사내하청 정규직 고용, 해고자 복직’이라는 이른바 “3대 방향성” 요구는 부족한 점이 있다.

정규직지부 지도부는 “3대 방향성”이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요구와 모순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을 더 분명히 내걸고 함께 싸울 필요가 있다. 혹시라도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여기며 자신을 스스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제대로 싸워 보지도 않고, “적정한 선”에서 타협하려는 태도를 낳을 수 있다. 올여름 주간연속2교대제 투쟁에서도

이런 태도가 노동강도 강화와 심야노동 철폐를 맞바꾸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일은 11월 29일 경고 파업의 성공을 다짐돌 삼아서 투쟁과 연대를 더 강화하는 것이다.

이번 경고 파업은 작업장 바깥에서뿐 아니라 작업장 안에서도 정몽구 일당을 밀어붙일 힘이 있고, 그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전환점이 됐다.

비정규직·정규직 연대의 가능성과 힘이 드러나다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에 적극적인 활동가들 속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그것이 가능할까? 하는 냉소적 태도를 종종 접할 수 있다.

이런 태도에는 경험에서 비롯한 합리적 핵심이 담겨 있다. 이경훈 같은 우파노조 지도부뿐 아니라 ‘민투위’ 이상욱 등 ‘민주파’ 지도부들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대를 저버린 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정규직 노조 상층 간부층의 태도와 견해를 현장 조합원들 전체의 것으로 보면서 구분하지 않는 허

이 점이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이 지난해 한진 희망버스 등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다.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은 작업장 투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큰 장점을 갖고 있다. 이 장점을 이용해 정몽구 일당의 숨통을 조일 때, 정몽구 일당의 무릎을 꿇릴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2시간 경고 파업이었지만,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요구를 사측

이 계속 무시하고 회피한다면 더 크고 강력한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이번 경고 파업에서 확인된 필승의 무기, 즉 대체인력을 저지하기 위한 비정규직의 투쟁에 정규직지부와 활동가들이 적극 연대한다는 원칙은 더 확고하게 지켜져야 한다.

허수영·김기선 노동자연대다함께 울산지회 활동가
▶ 관련기사 5면

정규직지부 지도부는 직고용 계약직 합의를 파기해야

11월 26일부터 시작한 현대차지부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당혹스러운 사실이 드러났다.

정규직지부 지도부가 11월 20일에 사측과 직고용 계약직 사용을 합의한 것이 밝혀진 것이다. 지부 지도부는 이것을 보고 안전으로 처리하려 했는데, 전투적 대의원들이 반발했다.

직고용 계약직 확대는 현대차 사측이 불법파견 문제를 피하기 위한 술수다.

지부 지도부는 사용 사유를 제한해 낱발을 막으려고 합의했다고 변명하지만, 사측은 이를 이용해 직고용 계약직 고용을 늘리려 할 것이다. 이미 현대차에 직고용 계약직이 1천5백 명이나 일하고 있다. 비정규직 조합원들조차 직고용 계약

직이 사측의 통제와 횡포에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큰 문제라고 말할 정도다.

앞서 2000년 정규직노조 정갑득 위원장이 비정규직 고용 규모 16.9퍼센트에 합의했던 것도, 사측이 비정규직을 확대하며 정규직·비정규직을 이간질하는 데 두고두고 악용한 바 있다.(현 문용문 지부장은 당시 부위원장이었다.)

이 때문에 전투적 대의원들이 반발하며, 합의문 폐기를 요구하는 현장 발의안을 냈다. 합의문 폐기는 현대차지부 확대운영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문용문 지도부는 또 다른 비정규직 양산 우려가 있는 직고용 계약직 합의를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허수영 노동자연대다함께 울산지회 활동가